

第215回國會
(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1日(金)

場 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 1. 2001년도예산안

審査된案件

- 1. 2001년도예산안 1

(11시15분 개의)

○委員長 張在植 장시간 기다리셔서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정책질의 하고 오후 본회의 개최 중에는 정회를 했다 가 질의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계속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孫忠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예산안

(11시17분)

○委員長 張在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

다.

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李漢東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국정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199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시게 될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소상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규모 증가 억제와 재정수지 적자 축소 등을 통해 균형재정으로서의 조기복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보·과학기술·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와 첨단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정보지식기반 산업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뒷받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예산과 환경개선 투자확대 그리고 농어가 소득기반 확충과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경제환경은 불안정하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국제경제

환경 변화와 충격에 뒤흔들리지 않고 안정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4대 부문의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작업에 더욱더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국정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디 정부의 예산편성의 취지와 방향을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천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을 회고해 보면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부도 위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주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경제를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해 왔습니다. 경제성장률은 98년도 마이너스 6.7%에서 작년도에는 플러스 10.7% 성장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에도 9%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작년 2월 8.7%까지 올라갔으나 차츰 안정되어 금년 10월에는 3.4%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에 힘입어 금년들어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때 39억달러로 줄었던 외환보유고도 금년 10월 현재 927억달

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자만심을 키우고 개혁의지를 느슨하게 만든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급속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반도체가격의 하락, 대우차 처리 지연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발생하고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금융경색과 노동시장의 불안,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등 경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와 도덕적 해이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다시 한번 IMF 경제위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범세계적으로 지식, 정보,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본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디지털·지식정보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이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어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기조를 견지하고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와 수출증대 그리고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원유가의 급등, 미국경제의 경착륙 등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에 대

비하여 비상경제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경우 내년에 우리 경제는 5 내지 6%의 실질성장, 3%대의 물가안정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선진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면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건전한 금융감독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준조세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동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술혁신과 인적 자원 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전통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지원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화감을 해소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안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남북교류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 간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의 지원에 주력하여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본격화하여 경기회복과 재정수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건전화 노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8 내지 9%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은 6.4%로 억제하겠습니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금년 예산상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줄이고 재정수지적자도 GDP대비 3.4%에서 1% 이내로 축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과학기술 혁신,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능력개발과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료 보장, 환경보전, 재해·재난예방,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그동안 크게 늘려왔던 농림어업,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지원은 투자 내용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어촌 투자는 농가소득의 안정과 신지식 농림어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나가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완공위주로 투자효율을 높이면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등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뒷받침하고 공공기관의 개혁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4조9,3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면에서 보면 내국세 68조5,440억원, 교통세 10조7,618억원, 관세 6조7,320억원, 세외수입 5조8,022억원, 국채발행 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내국세 및 교통세 수입은 경기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액과 세법개정 효과 등을 반영하고 관세는 수입증가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주식매각수입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3조432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족분 3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 23조2,913억원, 사회개발비 11조9,977억원, 교육비 16조2,681억원, 방위비 16조487억원, 일반행정비 9조1,174억원, 지방재정교부금 10조3,391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지원 2조2,898억원, 예비비 2조7,000억원 그리고 채무상환 등 제 지출금 2조8,7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22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계기준으로 66조5,096억원이며 순계기준으로는 59조2,554억원으로 금년보다 1조6,36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규모는 161조4,396억원이며 순계규모는 135조5,95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경쟁력 창출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년보다 16%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차세대 인터넷 개발 등 선진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5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체제 구축 등 전자정부 구현과 교육, 교통, 재난구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정보화 확산에 9,17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해킹, 불건전 정보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도 크게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G-7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R&D 투자를 4조1,0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R&D 예산 비중은 금년

4%에서 4.3%로 높아졌습니다.

생명공학·우주항공 등 미래 선도형 기술개발에 1,846억원을 투입하고 부품·소재 등 핵심 산업기술 분야에서 자립기반을 확보하도록 4,0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약, 의료 등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에도 1,5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신지식인 양성을 위해 교육투자를 금년보다 19% 늘려 23조5,2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년부터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인상하는 등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3조6,0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274개 학교를 신·증축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고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두뇌 인력양성을 위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과 연계한 전문대학의 특성화사업 등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올해에 이어 문화예산 비중이 1% 수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광역관광권을 문화·관광·휴양이 함께 하는 미래형 관광권으로 개발하는 데 1,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1,45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안방 전자도서관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도서관 정보화 예산을 확대하고, 낙도·오지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습니다.

넷째,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보다 16% 늘어난 8조1,34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2조7,3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2,7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여성가장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노인·아동에 대한 생계지원을 늘리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연금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유치원·보육원생 18만명, 중고교생 40만명, 대학생 20만명에 대한 학비지원 소요 3,1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민과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약분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1조9,009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데 1조5,34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무공해 LNG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자연생태계공원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세대를 위한 첨단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8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구적 수해방지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조5,679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의약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역관리를 강화하고, 식품·환경·교통 등 3대 분야의 반공익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8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먼저 부품·소재개발 전문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7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신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1,3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685억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전용의 수출금융자금 5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수출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벤처 집중지역에 초고속통

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벤처 선진국 진출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방화 및 국제화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한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신용보증, 창업진흥기금 등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은 민간투자의 확충 등을 감안하여 1조4,6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분보증제 실시, 회수자금 운용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금년보다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농림어업분야는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9조3,19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생산기반 조성분야는 영농기계화와 수리시설 개·보수 등 생산성 향상과 재해방지 투자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으로 3조1,70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유통분야는 생산자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물류표준화 등 유통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두어 9,8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도입과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논을 대상으로 ha당 20만원에서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어업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선 감척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해 총 3,4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늘려온 사회간접자본분야의 예산은 투자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는 2조2,020억원을 투자하여 서해안·중앙·대전·진주 등 주요 간선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철도부문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호남선 기존선의 전철화 착수를 지원하고 간선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총 2조4,15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지하철건설·운영 지원에 8,6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산신항·광양항을 대형 중추항만으로 개발하는 등 항만건설에 9,888억원을 계상하였고, 공항은 양양, 무안 등 지역거점공항 건설에 중점을 두어

3,2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 SOC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500억원을 총액으로 계상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에 5,00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6.2% 늘어난 15조 3,7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운영 유지비는 군장병의 복지와 능력개발분야에 역점을 두어 증액하였습니다.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장비현대화와 독자적 장비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보수는 2004년까지 중견기업수준으로 접근시킨다는 계획에 맞추어 내년 처우개선율이 6.7%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비용 1조 5,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혁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련사업비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경영혁신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혁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재정규모 증가의 제약 때문에 사회간접자본투자, 농어촌지원분야 등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을 확립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는 데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기반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배양하고 계층 간·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나가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계일류국가를 앞당겨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光琳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의 전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 30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음해의 경제여건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전망에 따라서 재정규모 증가율, 투자의 우선순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등이 달라지게 되고 국세수입과 국채발행 규모 등 세입재원의 조달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5~6%,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수준으로 예측해서 경상성장률은 8~9%가 된다는 전제 아래 재정규모를 그보다 2% 포인트 정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외화예산은 내년도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책정하여 편성하고 금융구조조정 및 국고채권의 이차지원예산 등은 내년도 이차율을 연 9.5%로 보고 그 소요를 책정하였습니다.

요컨대,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겠지만 과거 이삼년 전과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나 실업자 증가 등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는 대체로 금년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지난 10월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 즉 행정부 내에서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8·9월에 논의한 결과로서 국제유가의 불안과 반도체 가격의 하락,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특히 환율, 이자율, 유가 등에 관한 전망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직접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SOC투자의 사실상 동결은 건설투자가 최근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업관련 예산은 최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내년도 재정규모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101조300억 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6.4% 증가하여 경상성장률 전망치 8~9%보다 2% 포인트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 입니다. 내년에 재정규모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의 증가규모가 6조1,000억 원 수준인데 비하여 지방교부금, 금융구조조정 등 이자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필수증액 소요가 1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규모 증가역제노력은 일단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98년에서 2000년까지의 경험을 보면 당초 예산상의 재정규모 증가율은 7.0%, 5.2% 그리고 4.7%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지만 연도중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재정규모 증가율이 각각 14.5%, 9.6%, 7.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우 IMF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긴급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추경편성은 재정규율을 약화시켜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13일 금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또는 재

정적자감축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현행 예산회계법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 경제여건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경기상황에 신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보전용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조 원으로서 금년보다 8조 원 수준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GDP에 대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도 금년 2% 이내에서 내년에는 1%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할 경우 내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2.2%로 높아지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로서 향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의 증가로 재정수지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구조의 경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구조가 경직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01조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경기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소요가 법령이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비가 61조5,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61%에 해당하며, 99년의 52%에 비해 9%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예산의 경직성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직성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적자재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한층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예산의 편성·심의과정에서는 물론 법령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국세세입은 96조1,545억 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안 79

조7,029억원보다 16조4,516억원이 늘어나고 금년도 세입전망액보다는 4조7,05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법인세가 18조9,385억원, 부가가치세가 23조8,534억원, 특별소비세가 3조381억원, 교통세가 10조 7,618억원으로 금년도 세수전망치에 비하여 각각 19.5%, 8.2%, 20.2%, 11.8%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내년도 경제성장의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현재 관련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에너지세계편안에 따른 유류세 인상계획에 따라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는 연금과세체계 개편,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경감됨에 따라 금년보다 1.0% 감소한 17조3,06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는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전체 세수는 금년보다 21.0% 증가한 7조1,024억원이나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에 비해 38.2% 감소한 3조6,24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고, 주식매각수입을 4,721억원 감액 책정함에 따라 금년보다 3조940억원이 감소한 5조8,922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재정용자특별회계의 순세입의 경우 금년예산과 비슷한 6조1,0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재정규모 101조300억원 중 97%에 해당하는 98조300억원은 국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에 해당되는 3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가 세입전망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입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전인 95년과 96년에는 그 차이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97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99년에는 5.6%, 그리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14.7%의 차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망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작년과 금년의 경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

더라도 이 정도의 큰 오차는 세수추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현행의 세목별, 미시적 세수추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수추계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세수추계의 주요변수인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를 잘못 예측한 데 따른 경우가 많으므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비계획제도를 우리도 도입하여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기반의 확충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51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모두 14개 부문에 대하여 검토하였습시다라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융 구조조정·국채이자 예산, SOC 예산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과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지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적자금을 위한 이자지원예산은 금년도 5조9,549억원보다 9,309억원이 증가한 6조8,858억원이 재정용자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 국채에 대한 이자예산은 금년도 2조3,087억원보다 2,993억원이 증가한 2조6,080억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조2,302억원이 증가된 9조4,93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규모의 9.4% 수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적자금을 위한 이자지원예산 6조8,858억원 중 1조5,000억원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이자지원 예산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40조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이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4/4분기까지 5분기 동안 고르게 발행되고 이자율은 연 9.5% 수준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0조원의 조성액 중 상당부분의 채권이 예정보다 조기에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율은 현재의 금리나 주요 연구기관의 내년도 금리전망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자지원예산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지원예산으로 계상된 2조6,080억원 은 99년까지 발행한 20조1,000억원, 금년도 예산상 발행액 10조9,500억원 중 발행계획액 6조원 그리고 내년도 발행예정액 16조원에 대하여 연 9.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상 발행액 중 현재까지 발행한 3조6,000억원 이외에는 금년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연 9.5%의 이자율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지원예산도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중에서 그동안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대지급 등으로 지원한 23조 5,000억원 중 상당부분은 회수가 어렵고 20조5,000억원의 금융기관 출자지원분도 회수규모와 시기가 불확실하며 추가로 조성될 40조원의 공적자금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회수하기 어려운 분야에 지원되고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전가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실 예상분에 대한 전망과 만기도래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상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부가 민·관 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SOC 예산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SOC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SOC예산은 14조968억원으로서 2000년 예산 14조767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그동안 SOC예산이 전체 재정규모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 왔고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크게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서울지하철 2기, 인천국제공항 등 사업이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16.5%로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SOC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충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정의 형편 즉 지방재정교부금·교육·복지·국채이자 등 고정적 지출예산의 소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는 경우 SOC예산에 대한 투자를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투자지출의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다양화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정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계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입 첫해인 94년에 10개 사업 1조 6,070억원의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42개 사업 8조4,152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49개 사업 8조7,82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673억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회계법 제35조5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를 국·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일반국도건설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회계법에서는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의 배정방법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배정에 관한 특례조항사항이라기 보다는 총액계상예산의 편성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은 정부부처가 세부사업별로 추진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사업의 구체적 내역 없이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6대 국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연중 개최되고 있으므로 총액계상예산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면서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산이 의결된 후 구체적인 사업선정기준과 사업별 예산배분원칙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총액예산의 집행과정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집행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현장점검의 기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당초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사업 중에는 총액으로 편성하고 각 부처가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으므로 총액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개정 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기본사업비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결산과 예산을 보다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예산회계법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은 61년에 제정된 이래 89년의 전문개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틀은 이 법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통제 위주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예산편성이 골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기능별·성질별 예산편성은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국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통일과 사회복지에 대한 소요,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 21세기에 대비하여 국가재정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금년부터 상설화됨에 따라서 행정부와 관계가 보다 긴밀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의 전환, 국회 결산 심사시기의 조기화, 기금과 예산의 관계 재정립, 중기재

정제도의 보강, 기본사업비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총액계상사업제도의 개선, 성과주의 예산과 복식부회계제도의 도입 등 그동안 예산회계법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산회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학계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포함해서 질의방법은 결산심사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섭단체인 한국신당의 존경하는 金龍煥 위원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漢久委員** 위원장님, 아까 우리들 간 합의는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金龍煥 위원만 하시고 다음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龍煥委員**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풀어나갈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에 대하여 신뢰와 신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리더십의 부재와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성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야말로 경제위기와 전쟁,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부문의 개혁에 모든 개혁의 성과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어느 언론의 통렬한 지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독한 마음, 무서운 결단이 아니면 공공부문 자체의 개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합니다. 개혁에 성역이 있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금융, 기업, 노동 등 민간부문에만 개혁의 칼을

들이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을 먼저 개혁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중복된 기구를 통합·조정하고 규제간섭과 관련된 기구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부처의 통·폐합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술선수범해야만 민간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확립될 수 있고 국민도 고통분담의 아픔에 선뜻 동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1~2년간 정부예산을 전면 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력을 내수진작 등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데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부채가 IMF 기준으로 114조원에 달합니다. 공적자금을 비롯한 각종 보증채무, 부실한 연·기금의 적자, 자치단체 부채 등 문자 그대로 부채공화국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경제의 공동체개념과 공동번영의 토대구축을 위한 통일비용 수요에도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가롭게 또 어떻게 여유롭게 예산이나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직된 경비의 세출요인이 있는 데다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기존의 사고와 행동, 그 바탕과 틀을 깨고 부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례와 작위에 얽매어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전면동결해야 합니다. 단 1%도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세부담 경감도 아울러 검토해봅시다. 또 필요한 경우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금융부문의 여신을 대폭완화하고 건전기업들의 생산활동을 과감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회복되고 냉각된 경기도 균형을 잡게 됩니다. 또 그래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도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이른바 DJ 노믹스의 바탕이고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 핵심 국정지표인 생산적 복지는 이 경제철학의 한 축인 민주주의의 실현일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념과 사상 등 모든 체제의 뿌리이자 인간 삶의 영원한 명제인 자유와 평등에 다가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철학과 국정지표가 과연 오늘의 위기국면에서 실현가능한 것인가 깊은 우려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이같은 생산적 복지와 구조조정 즉, 시장경제의 요체인 경제의 효율성이 현실적으로 함께 병존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저는 여기에 크나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생산적 복지와 경제의 효율성을 같이 이룩하려는 이상은 좋지만 그것의 동시적 병행이 현 시점에서는 한국경제의 체질적 개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개혁의 값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해도 인원감축은 없다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해 왔습니다. 사회안전망 명목의 중복투자도 비밀비재했었습니다. 바로 이같은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과 미봉이 개혁의 실패를 야기시켰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근원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이 정부의 경제철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심각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이 부실채권 정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책임경영의 부재, 취약한 소유구조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은행이 주인 없이 운영되면서 권력의 간섭과 개입으로 사금고화 되었고 또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실사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책임운영시스템이 확립되고 그래서 선진금융기법이 실천되고 수익성이 제고되어야만 국제적 우량 금융기관에 필적할만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경영을 위한 여

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요체는 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지분보유한도 등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소유권에 바탕을 둔 참된 책임경영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법 제35조, 동일인·동일법인 여신한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장 못담는다는 속담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을 폐지한다는 의미에서도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재경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은 서구유럽의 선진이론과 시각을 충분히 수용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감안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만 적합성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IMF를 계기로 지난 40여년간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에 의해 부정되고 정부 또한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여기에 편입되어서 제반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괴리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로 의약분업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서구의 선진제도인 의약분업을 우리의 문화적 토양을 고려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행하려다가 의약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반발을 야기시키며 6개월여의 의료파탄을 자초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국제규범을 받아들이면서 곳곳에 유보나 제한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책의 혼돈과 부적합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나머지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동을 엄격한 감시체제하에 놓는 교육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한 예금 부분보장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왜 하필이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은 작은 불안에도 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 그리

고 우리 국민은 금융기관을 모두 정부기관으로 만들고 조건 없이 예금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의 선택을 신중히 하여 정책의 문화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1년 대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편성과 책임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신규사업은 완벽한 검토를 거쳐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의 투명성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1,2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준비가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즉흥적이며 무모한 예산편성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사업들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추경은 추경예산의 본질에 맞지 않는 불법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파괴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괴리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작금에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론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각이 정책추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국가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들은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 보고있는 이 현실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건 이상 믿어야 하고 못 믿으면 갈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정부 밖의 또 다른 힘이 개입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각도 스스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하십시오.

○權琪述委員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순계규모가 135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방대한 국가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사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여당에 의해서 납치되는 등의 전대미문의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회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 일정에 또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결산을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오늘 심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잔여회기가 12월9일까지 불과 8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대, 14대, 15대 등 지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소요시간을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정책질의에 평균 4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부별심의에 7일, 계수조정 또는 전체회의 처리에 7일, 해서 18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35조6,000억원의 예산을 심도 있게 성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의사일정 또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정책심의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일정은 12월4일까지만 확정이 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이나 농가부채특별법, 기금관리법 등 예산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책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라 살림을 소홀히 심사하거나 졸속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과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고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당 야당 양당 간사 간에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일정을 조정하도록 좀 말씀을 하셔서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權琪述 위원의 의사일정에 관한 말씀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자신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 전체의 움직임과 또 우리 예산위원회의 움직임이 맞물려 가야 하는데 국회 전체의 일정은 역시 양당 총무 간에 당의 조율을 거쳐서 합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좀 힘겨운 일이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양당 간사 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정은 전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총무 간의 일정과 조율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權琪述 위원 말씀대로 신중한 예산심의를 일정을 잡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丁世均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丁世均委員 존경하는 우리 權琪述 위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야 간사들이 그러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깊고 넘어가야 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당의 총무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는 예산심의를 끝나도록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양당 총무 간에 합의가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총무 간 합의정신을 받아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일정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시작해서 3일간 원래 결산심사를 해서 30일에 결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산이나 예비비승인의건이 30일날 통과가 안 되었지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29일까지는 못 하고 30일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약 반나절 정도만 지연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그 이후의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해서 이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그래야 양당 총무 간 합의정신에 맞는 것인데 아직 야당 쪽에서 잘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일까지만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다시 간사회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양당 총무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도록 그리고 그 정신에 걸맞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의사일정이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활동과 다른 것과는 구분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주어야지 자꾸 조건을 붙여서 원래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사일정에 차질이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난번 추경예산 때 원래 예결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별도의 합의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처리를 할 때 추경안 이외에 양당 간사 간에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공적자금관리에관한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건이 붙어 가지고 그것을 양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 그 합의사항은 지켜지고 있고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또 지난 30일 결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할 때도 7가지 조건이 바로 그 전날 10시에 제시되어서 새벽 3시까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 들어가는데 저는 분명히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심의이고 다른 제도 개선은 제도개선이고 별개의 문제로 해야지 제도 개선과 예산안 심의를 연계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예산심의를 예산심의대로 따로 하고 또 제도개선 문제는 상시 국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입법이나 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야당의 李漢久 간사 위원님과 함께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서 적시에 예산심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일이 우리 헌법이 요구한 예산안을 통과해야 될 마감일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하루빨리 예산심의를 제 때에 마치기 위해서 여당 간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감사합니다.

權琪述 위원 말씀하세요.

○權琪述委員 지금 여당 간사님께서 참 결론을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 예산심의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가 자칫 주마간산식으로 졸속 승인되는 역사의 우를 남기지 않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라고 그리고 조건 말씀이 나왔는데 결산승인 때 우리가 부대조건을 단 것은 사실 발전적인 결산의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농가부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심의하고 직접 관련되거든요.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 액수가 변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는 부득이한 것들은 조속히 처리되어서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申榮國 위원 말씀하세요.

○申榮國委員 조금전에 여당 丁世均 간사의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이 야당 간사인지 여당 간사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 예산안이 온 것은 여당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한테 결재 받으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제 것도 아니고 옛날 것까지 짚어가면서 자꾸 야당위원을 자극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여당 간사께서 원만한 예결을 운영하려고 하면 야당이 듣기 싫은 얘기, 들어서는 안될 얘기는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적은 것까지 또 몇 달 전 추경 얘기까지 꺼내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순조롭게 해 가려고 하는데 여당 간사가 앞에 나서 가지고 추경 때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내가 일일이 반박은 안 합니다. 전부 여당만 잘 했고 야당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야당이 협조할 수 없어요.

위원장께서…….

○鄭哲基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申 위원께서 마치 예산안을 야당에게 결재받는다든 그런 참말로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취소해 하세요. 여야가 여기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국가살림을 다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자리지 야당한테 와서 결재를 받다니요. 그런 상식 밖의 이야기를 어디 감히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취소해야 됩니다.

○金景梓委員 위원장!

○委員長 張在植 金景梓 위원 말씀하세요.

○金景梓委員 민주당 金景梓 위원입니다.

申榮國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를 아주 존중해서 국정을 끌여가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丁世均 간사가 방금 지적한 대목을 요약하자면 귀 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조건없는 등원이 라는 일대 결단을 내리셔서 들어오셨는데 다른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 같으니까 李會昌 총재의 조건없는 등원방침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여당이 하지 말고 잔소리 말고 그냥 듣기만 해라 하는 것은 좀 지나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의사진행을 좀 잘 합시다 하는 얘기로 듣고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이제 발언하셔야지요.

○金容鈞委員 위원장!

○委員長 張在植 말씀하세요.

○金容鈞委員 제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丁世均 위원님께서 우리의 국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에 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경 당시에 합의한 내용은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건에 미흡한 추경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예비비 심사 때에도 예비비의 방만한 지출이라든지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더 짜임새 있게 되고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참 땀 흘려서 밤새도록 합의를 해서 내놓은,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훌륭한 국회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합의를 하는 데 시간을 허송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교환하셨고요. 먼저 한나라당의 金容鈞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오늘 국무총리 안 나오셨나요?

○委員長 張在植 안 나왔습니다.

○金容鈞委員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대신 들어서 전달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농민이 붕기하고 근로자가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증시가 허덕이고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 흉흉한 민심은 천하대란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와 국회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면서 근검절약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액이 101조 이상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적자금 40조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총리! 정부 예산안은 편성 과정에서 2001년 경제성장률을 몇 %로 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정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8.5%에서 10%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도 11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간연구소나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는 우리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 이하로 보고 있고 심지어 3%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잡는다고 해도 7%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국민들의 실정을 봅시다.

세금을 내야 할 국민의 경제 실상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데다가 내년도는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무자비하게 국민을 쥐어짜고 세금을 인상하고 강제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큰 고통을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와 추징의 악순환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무리한 노력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燭淚落時에 民淚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稅金引上에 民淚落이요, 消費高處에 怨聲高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가예산안 제출권은 정부에 있으나 그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서 합니다. 현재 101조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약 20% 정도를 삭감을 해서 근검 절약하는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그 남은 예산의 20%를 SOC 사업 등 건설한 국가기간산업에 투자해서 국민의 일터로 만들어 주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데 쓰도록 하는 대혁신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물겠습니다.

만일 내년도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하거나 실업자 대책 혹은 경기부양 등의 이유로 정부가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냐 계획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추경예산도 심의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것처럼 추경사유가 아닌데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물겠습니다.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빛은행, 동방금고 사건 등에 이어서 또다시 발생한 열린금고, 한스중금 부정대출 및 리젠트증권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불법대출 자금을 회수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을 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감독기관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층, 관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한탕주의로 국가경제는 다시 한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혈세의 누설을 방지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수사당국의 석연치 않은 수사로 인해 국민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수사의 의문점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서 물겠습니다.

동방금고 사건의 핵심인 2000년4월 이전에 조성된 펀드 및 가입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鄭炫竣 사설펀드에 가입한 정·관계 고위인사와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었습니까? 불법대출자금, 사설 펀드 조성자금의 최종 귀착지 및 사용처와 그 회수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자살한 張來燦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살 및 타살여부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요? 張 국장의 승용차 행방 및 핸드폰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실시되었는지 그 감청 내역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팩토링 대표이사 吳基俊, 동방금고 대표이사 柳照雄의 해외도피 방조 의혹 및 그들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요구를 어떻게 해서 신병확보를 할 것인지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陳承鉉게이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陳承鉉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고 2개월씩이나 보도를 통제하고 수사를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陳承鉉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비호한 정치권과 관계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金銀星 국정원 2차장과 진승현은 어떠한 관계이며 金 차장은 이 사건 전후에 어떻게 개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까? 조사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진승현이 상환하지 않는 1,318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중금 전 사장 申仁澈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 그 조성내역에 대해서 수사가 되었습니까? 신인철이 정·관계 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도움을 준 인사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한스중금 전신인 아시아중금의 대주주였던 薛元植, 薛 范 부자가 불법대출받은 1,400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그 돈의 행방을 찾으셨는지요?

더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파악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214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외화예산 기준은 1,100원대로 산정한 이후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등 가용재원 3조9,000억원 중에서 추경으로 2조4,000억원을 사용하고 외채상환에는 1조5,000억만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모두 외채로 갚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장관! 지금 환율이 1,214원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지 않고 2조4,000억원을 외채로 상환하는데 썼다면 21억8,000만 달러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214억원을 외채로 상환할 경우 20억 달러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야당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외채를 상환했다면 약 2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

한 이후의 장관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른바 PK21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당초의 사업취지는 퇴색하고 전관예우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등급제로 하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의 대입제도를 보면 과연 대학이 무엇으로 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지, 대학의 자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장관은 현행 입시제도와 개선방안이 과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21세기는 두뇌의 평준화보다는 우수인재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 이와 관련하여 중·고교 평준화조치를 완화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특히 농촌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고교평준화제도를 철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농촌고교 출신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좀더 지급하든지 그 지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얼마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전국 농민이 시위를 하였습니다. 사채를 끌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고금리 때문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로 인해 도주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국가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농어촌부채 탕감 내지 경감을 약속하였습니다. 내년도 농림부예산에서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 때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의 합천군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데 대한 서면답변에서 단순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국도 3호선과 국도 24호선이 있지 않느냐, 88고속도로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우회도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전고속도로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을 때 합천에서 대전 가서 진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무성의한 대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

습니다.

이는 건설행정의 무지, 무계획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그저 떠밀어가지고 돈 없는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내주지 않겠다는 대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의약분업을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의료비 추가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서야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수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도로명 정비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은 우선적으로 과학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길 찾기를 쉽게 해서 물류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명만 제대로 부여한다면 거리에서 헤매는 차량이 적어도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서 미국식이니, 유럽식이니 복잡하게 자꾸 연구만 하지 말고 간단히 동서남북 도로의 개념이라든지 가로 또는 세로 개념을 통해서 한 쪽은 1, 2, 3, 4로 하고 한 쪽은 ㄱ, ㄴ, ㄷ, ㄹ로 하든지 해서 이러한 도로명을 잘 매겨 가지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한 연구, 추진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鄭哲基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委員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의 鄭哲基 위원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심장부로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장부가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무려 45.9%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의 84.4%, 30대 기업 본사 88%, 정보통신업체의 89%, 벤처기업연구개발기관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률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동경 수도권 32.3%, 파리 수도권 18.2% 등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이 3배 내지 1.5배 이상 과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인구분담률 증가치를 보면 프랑스 0.4%, 일본 3.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7.3%나 되어서 이대로 간다면 201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50%가 수도권에 몰려 살게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지금 난개발, 교통체증, 환경오염, 소음공해, 주택난, 에너지난 등 비능률, 비효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전 국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농촌지역은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1,384개 교가 통·폐합되었고 보건지소, 파출소 등이 연쇄적으로 폐쇄되어서 지방과 중앙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 간의 갈등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런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국토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 어느 것을 찾아보아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어느 항목도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관행적인 예산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가건설의 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의 지방분산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비전은 아시아 중추국가 건설입니다. 사람·물자·문화가 한반도로 모였다가 다시 부챗살처럼 동북아, 동남아, 나아가서는 전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뒷받침할 초고속 통신망 구축, 인

천공항 건설, 남북철도 연결 등 중추국가 건설의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 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류 중추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항만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은 중추항만 건설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2년에는 약 2,000만 TEU가 되리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약 60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계획대로 완성한다 하더라도 약 1,000만 TEU 처리능력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만건설은 소결음으로 지연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의지로는 2011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항만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배분율에 있어 현재 8%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항만부문 배분비율을 대폭 늘려서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건설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해양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항만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재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신항을 정부투자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항과 부산신항 건설을 위한 청와대 SOC기획단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건설을 위해서는 배후부지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이 93년1월에 허가가 되어서 금년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수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정부는 '98년 국가연구체계 구축과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총리실 산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의 연구회를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심의관실을 두고 연구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연구회 소요예산이 2000년 171억, 2001년 192억으로 책정되어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구소 위의 연구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심의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43개 연구기관을 원래대로 각 부처 산하로 환원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내년도 SOC 부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경기의 불황, 경기침체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SOC 부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결산 질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에 대한 시행규칙 2조에 항만부분 비율이 10%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8.1%밖에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항만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 10%대로 증액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관께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서 증액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을 연결하는 307억원 규모의 남도대교가 지난 6월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2년12월 준공예정인 이 대교가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정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농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논리와 경제적 수치에만 치우쳐 왔던 우리는 농업,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무려 4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후관리의 소홀, 사전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없이 시작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빛만 떠 안게 만들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IMF 이후 고율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8조라는 농가부채가 이제 더 이상 농촌과 농민에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명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농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농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지켜지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우리 국토가 유지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농민들이 부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생명공학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투자 실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겪었던 어려움을 거울삼아서 생명공학 분야 연구투자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 생명공학은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명공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결산제도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야 간에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소위원회를 공개하고 속기록 작성 등으로 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최소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제도개선 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容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委員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위원입니다.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중지하고 이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새로운 단계로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대신 누가 있습니까?

지금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작 행사의 주최자인 우리 적십자사 총재는 일본으로 출국한 후 아예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남북회담이 빛은 비극이며 국가의 자존심과 체면까지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북한이 문제를 삼고 있는 張 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부 북한의 가난한 생활상에 대한 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환장한 극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면서 張 총재를 비난하고 이산가족의 상봉까지 연기시킨 북한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오히려 본인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사과서한을 대리 작성하고 비밀리에 보내가면서 북한을 달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과서한을 보낸 사실조차 쉬쉬하면서 감추다가 결국 북한이 다시 비난성명을 내는 바람에 전모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라의 자존심을 몽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張 총재의 명의로 북한에 전달한 사과서한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쓰여진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통일부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張忠植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사과서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한적십자사총재의 결심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정감사 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적 사무총장 주도하에 저희 통일부는 인도지원국이 소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 작성을 해서 총장이 결심을……

○金容甲委員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물론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한적 총재께서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작성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봉을 앞두고도 북한은 張 총재를 뒷줄에 앉아라, 현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출국은 북한의 강요와 협

밖에 우리 정부가 꿈쩍 못 하고 굴복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사할린교포 문제를 논의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국했다가 일본 측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밝히는 바람에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코미디 한 편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사과서한을 발송한 것부터 張 총재의 돌연 출국 사태까지 모든 것을 국가정보원이 추진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張 총재의 일본방문에 관해서는 11월29일 오후에 출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장·차관이 모두 국회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참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金容甲委員** 남북회담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남북회담 총괄은 저희 통일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런데 통일부가 이 사실뿐만 아니라 상당히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 주요한 전략은 통일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 총재 출국사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남북관계 일정을 보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후속회담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북한의 뜻대로 일정이 지연되고 회담문제도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당초 정상회담부터 북한의 일방적인 지연으로 출발이 하루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초 11월2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던 4차 장관급회담은 북한의 일방적인 지연으로 12월12일에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적십자회담 역시 일정이 지연되어서 12월13일에야 3차 회담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말이지요. 적십자사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적십자회담이 계획대로 열릴 것 같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

기 때문에 북측의 지금 그동안의 내부사정으로 본다면 북측 사정상 속도조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金容甲委員** 이것은 속도조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그 날짜를 북측에서 통보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容甲委員**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총재의 교체설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북한의 특히 金正日 위원장한테 자칫 잘못 보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사까지 관여하는 이런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말 심히 걱정입니다.

국방장관회담은 아예 언제 열릴지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라산관광단 방문은 북한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남의 연내 서울방문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정지연에 대해서 북측이 속도조절 문제를 제기했고 상호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조절의 주도권조차 완벽하게 북한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속도조절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는 결코 빠르지 않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속도를 조절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식량도 얻고 비료지원도 얻고 경제지원도 얻어 갔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민간지원을 포함해서 무려 1조원이 넘는 돈이 북한에 지원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어제 통외통 상임위에서 3,50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남은 2,500억까지 합해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돈만 해도 6,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까지 북한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추석에 송이버섯 조금 얻어 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받아서 제가 즉각 거부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송이버섯 먹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북측의 요청과 그리고 적절하게 다 배분을 해서 북측도 일종의…….

○**金容甲委員** 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의도대로 저자세로 끌려다녀야 합니까?

물론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50년 만의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기단계가 지난 지금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사항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굴욕적인 정책들은 관계개선의 초기 단계에서 빚어진 오류로 본다면 앞으로는 분명히 정상궤도로 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 되면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북한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주의적 자세와 국제적 외교관례에 입각해서 남북대화의 질서를 새로 잡아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안과 불만으로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도 이해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재정비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문제는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관광사업은 약 3억 달러가 입산료로 지불되고 앞으로 6억4,800만 달러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지금 상당히 파산직전에 몰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에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입산료를 적어도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 이것을 낮출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현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통일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이번 회기내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국가보안법 개정추진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의 방안으로 내걸었던 4대 근본문제가 이 정권에 들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남한내의 반미감정과 북한의 미북평화협정 추진으로 단계적 철수론이 현실화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폐지 문제는 국정원이 스스로 간첩잡기를 포기하다시피하

고 있고 국정원장이 북한의 파트너로 대북창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북단체 활동보장문제는 대학 캠퍼스에 인공기를 내걸어도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시피하고 만일 국가보안법이 개정된다면 바로 그런 문제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역시 현정권이 앞장서서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내걸었던 4대 근본과제가 거의 모두 남한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추진이 가져올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이것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해서 남한내의 이념갈등이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굳이 개정하려고 하는지, 총리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들여보이며)

그리고 법무부장관, 어제 일간지에 재향군인회 성우회에서 광고 낸 것을 보셨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봤습니다.

○**金容甲委員** 여기에 보면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650만명의 회원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작을 해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 점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관계 진전, 이런 상황을 봐서 국민의 여론을 참작하고 여러 가지 상황진행에 따라 걸맞게 검토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金容甲委員**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만 질의를 하고, 소도독을 잡아도 신문에 나는데 간첩은 잡아도, 잡지도 않지만 요즘 신문에 안 납니다. 그렇게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육이 뭐냐 하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만하겠습니다.

.....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金聖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委員** 간디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간디가 살아계시면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정치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동료위원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야가 합쳐서 산적한 많은 일들을 정말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003년까지 균형재정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만큼은 그 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IMF 경제위기 여파로 중산층 비중이 97년에 68.5%인데 99년에 64.8%로 감소했습니다. 가정 해체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불안요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제성장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성장을 한들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 비중이 51.7%로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하루하루의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잠재적 빈곤층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불평등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97년에 0.28에서 99년에 0.32%로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또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세출예산을 보면 6조5,700 억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이 6.6%로서 처음으로 6%대를 돌파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지만 이것은 겨우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할까말까 합니다. 여전히 OECD회원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5% 정도까지, 아무리 못해도 2년이내에 12%까지는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께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종전과 달리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생산적 복지가 되기가 아주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활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아주 부실하지 않습니까? 소득공제제도는 처음부터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8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2002년에 가서 도입하기로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필요한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만약 현 계획대로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2002년으로 유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활보장기금설치 운용인데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추경에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시행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발적인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금년 추경규모인 250억 정도는 더 계

상해서 모두 합해서 5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생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또 다릅니다. 내년 예산에 1만6,000명 분으로서 50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3만5,000명 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자면 추가로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자활사업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전문요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이들은 주당 평균 5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으로 지금은 주당 9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직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내년까지 7,20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500명선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4인가족 기준 93만원을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왔는데 실제 지급액은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12만1,000원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한 후의 대상자의 경우 14만1,000원으로 2만원이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2,604억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습니다.

지금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인력에 비해서 현 인원수가 6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도 24시간 근무자가 전체 시설 직원의 45%에 달합니다. 어떻게 매일 근무를 합니까? 그래서 매년 이직률이 22%입니다. 이러한 분야, 이와 같이 취약한 분야를 그냥 놓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이들 보수수준을 공무원수준으로 올리고 법정인력배치를 하고 2교대로 근무하게 할 경우에 총 1,500억 정도가 더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줘야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만일 이 돈이 너무 많다면 우선적으로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라도 그 사회복지시설의 생활보조원들 이분들만이라도, 이것은 아주 중노동입니다. 약 한 400억 듭니다마는, 그래서 이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바로 복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99년 현재 전국의 1만8,700여 보육시설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9.4%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문제는 사실 국가나 사회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용자보육시설이 지금 크게 경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보육인프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97년 하반기부터 용자금이자 및 원금 상환이 개시되면서 아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가 완료된 곳이 벌써 84개소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81개소, 원금 연체가 309개소 이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8월 이자율을 연 8%에서 6%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10월 현재 경매가 완료된 84개 시설 중 33.3%는 주택이나 사무실, 위생업소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용자보육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없으면 영유아보육문제에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를 또 좀 낮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자보육시설에 대한 경매자제를 좀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지금 노동부의 어린이집 용자금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용자금의 금리가 3%인 점을 감안해서 현재 6%를 다시 3%로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활공공근로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2000년에 7,709억원이던 공공근로예산이 내년에는 국비, 지방비 합해서 금년수준의 48%에 불과합니다. 4,000억입니다. 이 축소의 폭을 크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추경예산 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마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대다수가 아주 저학력,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으로 이분들은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학력으로 중졸이하가 62%,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70%, 성별로는 여성이 59%나 됩니다. 그리고 전직별로는 재취업이 어려운 일용직이 31%, 주부가 16%, 자영업 5% 이렇게 약 70%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소득분배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금년 4월에 소득분배구조 3개년계획을 중장기개혁 과제로 수립하고 계시는데 과연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각 소관 부처별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이 계획을 뒷받침할 2001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聖順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李在昌 위원입니다.

2001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는 먼저 내년 예산을 다루기에 전제가 되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과연 적절히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지금 심의하는 당시에는 너무도 변화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으로 봐도 그때 당시에 법인세를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답변을 정부당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세출도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40조원을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도 과연 지금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을 그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그야말로 외국 신문에서도 IMF의 모범생으로 칭찬받던 한국이 지금은 퇴학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가장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미국의 유력 신문이나 또는 영국의 유력한 일간지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상황에 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IMF 위기를 탈출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모범생이라고 자처하면서 매달렸던 것이 허상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제 냉철하게 이 허상을 진솔하게 분석하고 왜 그런 원인이 일어났으며 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어느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냉정한 정책의 판단의 토대 위에서 내년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2의 경제위기를 맞는다고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결산심사 때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의 정부의 처방은 이제 40조원의 공적자금만 투입이 되면 우리 금융구조조정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고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 또 실물경제의 실태, 지금 주가를 비롯한 모든 경제현상을 봤을 때 이 공적자금 40조만으로 과연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부장관께서는 이 공적자금 40조원을 가지고 이 어려운 국면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국면에 있나 하는 판단의 기초 위에서 이 문제를 좀 중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정말 정부의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부터 우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편성을 보면 정부에서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6.4%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기준이 같아야 합니다. 이 6.4%라는 것은 추경예산 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의 당초예산에 비하면 9%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보았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내년도에 이렇게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이 우리 재정운영에 과연 적절한 판단으로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세입부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세의 경우에 7조5,764억이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대로 되는 기업 없습니다. 또 주식가도 이제 500선도 무너졌다고 할 정도인데 과연 주가가 올라갈 때를 기준으로 한 이 법인세 세수추계가 적절한 것인가, 또 교통세를 10조7,618억으로 1조3,194억을 올렸어요. 이것은 유류세에다가 사실상 부과한 것인데 국민생활이 어렵게 되면 당연히 유류의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이 세수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지금 공적자금 투입문제, 이것도 새로운 수요이고 이제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자대책 또 신복지개념에 의한 비용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세입은 확실성이 의문시되고 세출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에도 공적자금 투입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재정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재정건전화에 위한 새로운 검토 없이 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제출안 중 이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소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균형재정예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과연 2003년에 어떻게 균형재정을 이룰 것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부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 특단의 조치라고 강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2003년 가면 균형재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판단과 전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안편성의 토대가 되는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하는 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위 장단기적인 하나의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조조정이 잘 돼서 우리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재정도 큰 어려움 없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위기, 우리가 97년12월에 IMF 위기를 맞이해서 급작한 변화에 적응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있을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번 예산을 통해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왔을 때라면 어떻게 내년 재정을 운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국민조세부담문제에 있어서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20.6%는 상당히 우리나라로 따서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없을 때는 그런대로 가야 될 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무척 우리 국가경제에 있어서나 국민생활경제가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세부담률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소위 탈루음성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또 결손처분한 징수결정액이 그냥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실있는 세정을 다룸으

로써 조세부담을 낮추면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적자금부담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조8,858억의 예산을 이자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철저하게 국민의 통제하에서 또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회수도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그때 국민의 통제하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더 장치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이 공적자금을 통해서 우리 금융구조조정을 건설하게 하고 그래서 신뢰도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부가 솔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서 이 공적자금이 회수가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기하는 금융구조조정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건설하게 되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제 통과시키려고 하던 이 안이 아직까지도 타결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또 국민의 여망이 공적자금은 언제든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 이 확보나 배분이나 회수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가장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또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강조될수록 더욱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반하는 남북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민간인이 교류

협력을 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 배경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16조, 17조를 보면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SOC시설인 경의선 철도나 도로건설을 이 협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 자금을 협력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하루빨리 정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법률적인 측면에 깊이 검토한 결과 위법한 것을 소위 정책적 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지금까지 집행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부별심의 때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李在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金德圭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委員 민주당의 金德圭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많은 분들이 현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경상수지, 물가, 환율, 외환보유고뿐만 아니라 공장가동률 등 지표상으로 결코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제2의 IMF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잠시 지연되는 사이에 금융과 기업의 부실이 늘어났고 그리고 경기상승을 주도했던 소비의 활력은 금년 2/4분기에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반도체가격의 하락은 물론이요, 환율상승, 미국과 세계 경제의 하강과 같은 불리한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일 한국의 거시적 비전을 향한 대승적인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서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이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간신히 자생력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폭락이나 중동전쟁과 같은 강한 외부충격이 온다면 우리의 금융시장은 급격히 무너질 것이고 이것이 곧바로 실물부문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 그러고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부실정리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은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재정의 역할을 집중시켜야만이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줄여서 건전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정의 건전화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채 상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4년 경에는 국가채무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GDP 대비 10%선까지 회복하겠다는 장기적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매년 실질성장률이 6%이상을 기록해야만 하고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세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내년에 공적자금의 추가소요와 의약분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기금의 부실, 이자율 상승 압력에 따른 국·공채 이자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세출 증대요인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낙관적인 예상과 달리 국내외 요인들이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과연 86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재정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니다.

2001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도 2% 내지 3%포인트 정도 낮아지거나 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과 설비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강세 지속 속에서 거기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순수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해서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재정부장관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어서 3%이상의 물가가 상승하리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이 국내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비용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차를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부터 유가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서 증폭된 실업문제가 지난 99년 2월 실업자 수 178만명, 실업률 8.6%를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실업자가 80만명, 실업률이 3%대라고 하는 안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시행된 부실기업 퇴출과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겨울철 건설일용직의 실직과 함께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서 총 20만 5,000명의 실업자가 새롭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최고 9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서 실업률의 4.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소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조차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전망치에 대해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던 금년 1·2월에도 실업률이 5.3%까지 치솟아서 실업자가 112만명까지 증가했던 점에 이렇게 비추어볼 때 경기하강국면이 이어질 내년 2월의 실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서고 그러고도 실업률은 5.3% 내지 5.4%에 이를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내년도 실업전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건설업계의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건설부문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이 참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취업문이 여전히 비좁아서 21만명에 이르는 4년제 대학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실업문제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안정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더 많은 실업대책예산이 요구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실업예산을 금년보다도 3,000억원 정도가 감소된 5조6,000억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업예산도 실업률이 3%대를 유지하리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업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이 고용보험, 취업교육 등 비생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근원적 실업해소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장기실업자·여성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金元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委員 한나라당의 金元雄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의 세부내용을 전부 밝힐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金元雄委員 저희들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의 세부명세서를, 세부내용을 밝힐 수 있는지? 자료요구를 하거나 할 경우에…….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마 주무부처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밝힐 수 없는 내용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주무부처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를 들면 각종 조사활동비 가운데서 대외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 행정업무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에는 아마 공포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조사업무 중에서……. 그러면 주로 검찰청이나 경찰청 쪽의 업무가 많이 있겠네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金元雄委員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밝힐 수 없는 법적 근거 말씀이십니까?

○金元雄委員 예.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를 들어서 통계청 같은 경우…….

○金元雄委員 국회법에 보면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 제128조에 보면 보고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떻게 무슨 뜻으로 밝힐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잘 아시겠습니까. 법 제도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도 있고…….

○金元雄委員 아니, 특별법 관계는 제가 알겠는데, 특별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산회계특별법에 관계되는……. 국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법이 있는데…….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면서 후법우선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元雄委員 예.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후법에서 일반법 뒤에 나온 후법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밝힐 수 없게 해놓은 경우에는…….

○金元雄委員 그런 법의 규정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있을 수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요구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金元雄委員 그러면 심의도 안 하고 요구한 대로 그대로 넘깁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기도 하고 사업내용을…….

○金元雄委員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타당한가 안 한가,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총액…….

○金元雄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이쪽에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셨는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소위 정보…….

○金元雄委員 아니, 심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얘기 들어보세요.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것이 총액으로 들어오고…….

○金元雄委員 그러면 총액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심의를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총액으로 들어온 경우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元雄委員 아니, 전년도 실적이라는 것이 사업별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년도 실적이라는 것이 예산을 주었는데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실적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이 무슨 심의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전년도에 사용한 규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것을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년도 총액을 냈는데 이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 써도 내용은 확인 안 한 채 총액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을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일반적으로는 심의를 하는데 고도의 정보활동비라든지, 수사활동비라든지…….

○金元雄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亨根委員 특수활동비와 정보활동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金元雄委員 총액만 했다는 얘기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크 안 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비목에 따라서 고도의 정보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金元雄委員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지 않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어느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까? 다 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원래 비목의 용도상 특수수사활동비라든지 정보활동비 같은 것은…….

○金元雄委員 그것이 관행입니까, 규정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규정에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총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金元雄委員 총액으로 받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지요? 총액으로 받아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예를 들면 검찰청에 얼마의 특수활동비가 있다, 몇천만원 된다, 그런데 그 총액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 안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백하시는 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기획예산처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고…….

○金元雄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아셨다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검찰이나 또는 경찰청 이런 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심의를 안 하고 총액만 보고 1년에 몇 %씩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元雄委員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중에는 이용·전용하는 내용이 있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와 같은 경비로 이용은 원칙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는 데 실제로는 쓰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金元雄委員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비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전용을 주무부처에 위임해 준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처까지 와서 승인받아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활동비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저희 기획예산처…….

○金元雄委員 위임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자체 예산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목에 따라서, 세출내용에 따라서…….

○金元雄委員 예산회계법을 보면 제37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제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99년2월5일, 99년5월24일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특수활동비는 위임이 안 되었습니다.

○金元雄委員 아까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제가 그것은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비목 상호간에 융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을 해 주고 있고…….

○金元雄委員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특수활동비는 위임을 안 해 주었습니다.

○金元雄委員 조금 아까 위임이 되었다고 한 말씀을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제가 그때 특수활동비 전용을 위임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비목에 따라서 위임해 준 비목도 있고…….

○金元雄委員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전반적으로 정기감사 때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받습니다.

○金元雄委員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기획예산처는 특수활동비가 없고요…….

○金元雄委員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각 부처에 대해서요?

○金元雄委員 예.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면 그 안에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면 감사원장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감사원사무총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특성상 예산에서 인정해 준 비용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예산도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서 예산비목의 특성상 총액을 정해 주면 그 총액 내에서 집행이 되었는가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서류로 확인하는 데 다만 집행한 상대방의 인적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총액을 감사합니다.

○金元雄委員 지금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를 별로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특수활동비도 총액 감사합니다.

○金元雄委員 총액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니까 총액 감사만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의 업무내용이나 심의나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예, 총액만 제대로 쓰였는지…….

○金元雄委員 지금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도 자료를 내놓으라면 안 내놓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것은 심의할 때도 심의도 안 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총액만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생

각하십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수활동비가 작년만 해도 4,71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용된 것은 전용·이용을 해서 9,316억원이나 전용·이용을 했습니다. 무려 두 배 이상을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거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아무 데서도 감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 데서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든 서류를…….

○金元雄委員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특수활동비는 검찰이나 경찰, 청와대 이런 데 있는 곳은 우리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감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하지만 거기는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 아닐까요?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특수활동비는 예산에 계상해 줄 때부터 업무특성을 인정을 해서…….

○金元雄委員 아니 우리 국회에서 누가 예산에 계상해 줄 때 특수활동비를 감사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국회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어디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부터 특수활동비는 감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수사활동 등 특수한 경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내역, 예를 들면…….

○金元雄委員 제가 지금 이 말씀 분명히 드리는데요. 이런 관행이 된 것이 1962년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때부터 만들어진 관행입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까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들어간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 것이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수사비, 공작비,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공작, 국회의원을 감시하기 위한 공작, 그런 뒷조사하는 데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관계기관 대책회의 한번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어떻게 회의비가 10억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지금 국회에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검찰도 안 내놓고 경찰도 안 내놓고 아주 죽어도 안 내놓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밝혀지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한 수사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떼떼하지 않은 돈의 쓰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킁킁하고 음습한 그런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저는 총리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정권교체가 이루어낸 민주정부라고 지금 자랑하는 국민의 정부,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독재시대 때 만들어 놓은 권력에 편리한 제도, 독재시대 때 만들어 둔 권력에 편리한 관행 여기에 안주하고 이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말하는 개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좀 나와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특수활동비나 수사비, 업무추진비 이것 지방청별로 세부명세서의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으십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사건수사라든지 그에 관련된 정보비는…….

○金元雄委員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정보비라는 것,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金元雄委員 알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요?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법적 근거를 물은 거예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수사와 정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수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金元雄委員 지금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아니, 지금 그 법적 근거를 수사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수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명세서를 줄 수가 없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가 말씀드리지요. 수사에 관련된 수사정보비라는 것은 이것은 재판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고유한 업무활동에도 문제가 되고 또 재판에도 본인들이…….

○金元雄委員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관계인들의 명제도…….

○金元雄委員 그러면 재판이 끝난 수사활동비는 줄

수 있어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金元雄委員 재판에 영향을 안 주고 재판이 끝난 수사활동비 작년 것, 제작년 것, 3년전 것 줄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관련된 명예가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피의자라든지 피고인들…….

○金元雄委員 그러면 명예는 법무부에서는 갖고 있어도 되고 국회의원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이…….

○金元雄委員 법무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 말 좀 들어보시고 얘기하십시오.

○金元雄委員 아니,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으면 그분의 명예가 훼손 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도 보호하고…….

○金元雄委員 아니,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발상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법률에도 국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회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위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金元雄委員 지금 분명하게 제가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리는 데 법무부장관님은 법을 지켜야 될 가장 총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 128조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내줄 수 없다, 법을 지금 여기는 겁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게 아니고요.

○金元雄委員 그게 아니고는, 국회법 제128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여기 보면 자료요구할 때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재판과 수사에 관계된다든지 이런 개인의 명예가 문제되는…….

○金元雄委員 그러면 재판과 수사에 관계되는 특수한 사항…….

○法務部長官 金正吉 좀 얘기 좀 듣고 그러십시오.

○金元雄委員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를 취하신 적 있으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다른 조항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낼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자세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元雄委員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 이것 그대로 놔두고 업무추진비,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음습하게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개혁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질의가 일단 모두 끝났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국무총리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언제 국무총리가 와서 답변할 것인지, 지금 답변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위원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야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무총리께서는 모든 정책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답변할 때 오셔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여야간사 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金龍煥委員 알겠습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2조4,000억을 외채상환했다라면 외채상환비용을 약 2억불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 시에 세계잉여금 중 추경예산에 계상된 나머지 세계잉여금은 1조6,000억원입니다. 1조6,000억원은 12월에 부채조기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왜 이 세계잉여금 전체금액을 외채 갚는데 쓰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국가가 채무를 지고 있는 외화채무는

약 200억불인데 이는 주로 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공공차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만기가 장기인 차관이므로 일시적인 환율변동에 따라서 상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차관은 산업은행 등 전대받은 공공기관이 상환일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상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金聖順 위원님이 총리님과 관계부처에 소득분배 구조 3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소관분야별 세부추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소득분배현황과 향후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소득불균형현상을 2002년까지 OECD수준으로 개선하고 실업률은 3% 수준으로 안정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만개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조세의 소득분배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1월5일 경제차관회의를 통해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산·서민층 대책의 추진과 지니계수를 포함한 소득분배배율이 IMF위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중산층, 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정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성장의 추세를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다시 정상화시켜서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在昌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李在昌 위원님께서 크게 저한테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얼마 전까지 우리가 IMF 모범생이라고 했는데 미국과 영국의 일부 신문을 보니까 'IMF 모범생이 아니고 퇴학위기에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은 외국인론기관이나 국제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경제가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의 방향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데 그 속도가 지난 총선을 전후로 상당히 늦어져 있고 개혁의 모멘텀, 하나의 전기를 잃고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현재 경제 제2기 팀이 약속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한국경제의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우리가 IMF를 졸업했다 하지만 사실상 퇴학의 위기에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외국기관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는 좀더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LA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한테 경고성입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정치적인 문제, 노사 문제로 인해서 좌절될 경우에는 진짜 번지점프에서의 한국경제가 좌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하나의 경고성 내지는 격려성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금년 연말까지 배수진을 생각해서 일정을 정하고 계류되어 있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은 연내에 시스템개혁을 완료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작동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쓰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인 공적자금 추가도입의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주십사 간청해 올립니다.

두 번째로 제2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적자금 40조만으로 난국타개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IMF 외환위기를 탈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의 긴장감의 이완, 일부의 자만심, 그리고 사회이익집단의 커진 목소리가 행동화되는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외적인 여건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상당히 두바이 기준으로 배럴당 약 28불 수준으로 내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높은 고유가, 반도체가격의 급락, 대만까지 포함한 동남아 자본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미국의 경제 경착륙에 대한 경고 내지는 위협수위의 상승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처해서 남미 여러 나라에서 경험했던 IMF 3년차의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쓰고 있고 공적자금 40조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昌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40조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지는 않지요.

○李在昌委員 그래서 우리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리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당면한 것은 이렇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좀 진솔하게 정부에서 정책수행한 것이 다 잘 되었는데 40조원만 부족해서 그런 것 모양 이렇게 오해될 수 있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셋째로 조세부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진다는 말씀은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현 수준에서 더 나빠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제의 상승속도가 작년 금년 속도에 비해서 반쯤 수준으로 감속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내지는 지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때는 실질경제성장 기준으로 5 내지 6% 회계 디플레이터라 해가지고 일종의 물가상승폭이지요, 이것을 3% 정도 보면 경상성장률이 8 내지 9% 수준인데 예산도 경상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율은 2% 포인트 낮은 6.4%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제는 내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과연 5% 되느냐, 6% 되느냐,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내년도에 이른바 경상수준으로 환산하는 디플레이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국내외 경제기관으로부터, 물론 저희 재정경제부 관계부처를 포함해서 국내외 경제기관으로부터의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제가 말씀드리면 KDI는 10월

20일 내년도 5.4%, 물론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한테 약속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실질적으로 5.4%, 산업은행은 10월30일 현재 5.9%, KIET는 9월21일 현재 6.2%, 삼성연구소는 9월27일에는 6.6%로 보다가 11월20일에는 5.7%, 현대연구소에서는 5.5%, LG는 9월에 6.8%, 한국경제연구원은 5.3%, IMF는 좀 높습니다. 6.5% 나왔는데 OECD가 11월에 예측한 것은 5.8%, 물론 세계경기가 유가가 3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미국경제가 경착륙하게 되겠다, 반도체가격이 더 추락을 하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이 시나리오는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제 요건과 정부가 약속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때는 현 시점까지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5 내지 6% 정도의 실질성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볼 때 상반기는 성장속도가 낮고 하반기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이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통해서 내놓은 세수전망도 그러한 궤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정부도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근로소득세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줄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이제까지 근로소득세를 IMF 전에 비해서 30% 줄였고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심의 통과된다면 20%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줄이기 때문에 IMF 전에 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50% 줄인 모양이 됩니다.

또 일부 소위 특소세도 이제는 가계에 필수적인 품목이 된 특소세는 전부 삭감을 했고 중산층과 서민근로자를 위한 비과세증권저축제도도 도입안을 현재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국세행정 강화를 통해서 음성탈루소득, 상속증여세의 과세는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李在昌 위원님께서 공적자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관리와 회수에 대해서 철저하

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재경위에서 여러 가지로 범문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 3년 동안에는 그 전에 해 보지 못했고 너무 다급한 사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동의요청을 드리면서 공적자금의 투입요건, 관리, 회수 그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관리시스템을 갖춰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재경위원회에 보고도 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李在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공적자금이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최종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德圭 위원님이 주신 몇 가지 질의입니다.

2003년 균형재정의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국채발행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 미만 수준으로 낮추는 아주 획기적인 건전재정 의지를 담은 예산안입니다.

물론 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3년 동안의 우리 경제가 5 내지 6% 정도의 건실한 실질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개편이나 또 징세노력의 강화 이런 것이 감안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의 실적과 금년도 전망, 내년도 예산실적을 보아 가지고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는 필히 달성해야 하고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농민문제랄지 또 사회복지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현재 정부가 방침을 확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려버리면 재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적자금의 회수를 철저히 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이나 이 두 가지가, 전반적인 안정성장을 전제로 할 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 큰 관건이라고 보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李在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으니까 그것으로 같음을 하고 내년도 물가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금년도 하반기 중에 고유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수가의 조정 여러 가지 문제가 금년 하반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올라간 그러한 요인들이 내년도 상반기, 1월부터 그냥 안고 넘어간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유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소위 물가의 높은 수준은 내년 1/4분기 상반기까지는 통계적인 그런 기술적 이유만으로도 해서라도 상당한 수준 올라갑니다마는 그것을 고비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안정세를 회복함으로써 해서 연간으로는 3%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聖順委員 소득분배 구조개선 3개년 계획은 금년4월에 수립한 것이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金聖順委員 그런데 경제여건이 금년 4월 이후에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것이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목표대로 정말 2002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예컨대 지니계수를 0.32에서 0.28로 낮추고 또 특히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비율은 5.49배인데 이것을 4.5배 수준으로 낮추는데 이상이 없겠는지 그것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저희가 소득분배 구조개선 3년차 계획을 만들 때에는 내년도에 6% 정도 성장, 내후년도 6% 성장 이것을 전제로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거시경제지표에서 내년도에 오류%, 내후년에는 한 6% 성장을 전망을 합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해서 오랫동안 간다, 미국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된다, 동남아의 소위 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요가 더 심하다 하면 그때는 저희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예비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게 되면 그 계획도 수정·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저희

가 내년도에 오류%, 내후년에는 한 6% 성장의 경제전망을 하고 그런 일정에서 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당장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는 좀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聖順委員** 지금 4%대로 실업률이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3% 미만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실업률을 낮추려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어떤 자활사업비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자활사업비를 충분히 주셔 가지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활사업은 돈도 돈이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金 위원님께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운영시스템 효율화를 같이 병행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법무부장관입니다.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동방금고사건과 관련하여 정현준이 불법대출한 자금을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현준은 금고에서 대출 받은 돈과 사설펀드 모금 등으로 해서 조성된 자금을 대부분 사채변제와 당좌결제에 사용했으며 190억의 대출금 가운데 약 100억원 정도는 지주회사 설립준비를 위해서 관련 주식을 사 모으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의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 정현준이 조성한 사설펀드에 정·관계 인사나 검찰 관계자 등이 가입하였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펀드에 실제 가입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금액이 큰 가입자 수십 명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정현준과 그 직원들을 조사를 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관계 인사 등이 이에 가입한 사실은 전연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 검찰이 오기준과 유조웅의 해외도피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10월20일 일요일 금감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기준은 지난 10월26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방금고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정현준과 이경자는 각각 10월25일 밤과 10월26일 새벽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 이경자 등으로부터 오기준의 혐의사실에 대한 일부진술이 있어서 검찰로서는 그때야 오기준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일부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기준이 출국할 당시에는 이미 오기준이라는 이름조차 수사선상에 아직 떠오르지 않았었고 검찰로서는 오기준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유조웅에 대해서는 유조웅은 동방금고 대표이사인데 금감원에서 지난 10월22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현준 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이전인 10월21일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오기준, 유조웅의 해외도피를 방조하지는 않았고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찰은 오기준과 유조웅에 대한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이나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하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 장래찬 전 감독원 국장의 사인에 대하여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봉천동 모 여관의 종업원이 지난 10월31일 오후 3시50분경 그 여관에서 장래찬이 목을 매어 사망했다는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검사와

검찰직원이 바로 나가서 검시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11월11일 오전 9시45분경부터 12시경까지 국립과학수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목 부위에 빨래줄을 네 가닥으로 엮어서 고리를 매가지고 목을 맨 상흔 외에는 다른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현장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유서내용을 정밀하게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 발견자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시결과와 부검결과 그리고 확인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자살에 의한 의사가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는 장래찬 전 감독원 국장의 핸드폰을 감청 안 했느냐 또 장래찬의 승용차에 대해서 행방을 알아본 일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장래찬의 검거를 위해서 검거반을 편성하였었고 또 여러 방법으로 검거작업을 진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수도 권유를 해서 장래찬 검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장래찬의 자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입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장래찬을 검거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굳이 감청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동방금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래찬의 승용차의 행방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는 검찰에서 진승현 관련 사건을 2개월 동안 보도통제를 하고 수사를 지연한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금년 9월6일과10월24일 두 번에 걸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진승현에 대한 주가조작, 보험모집,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에 관해서…….

금년 9월6일과 10월24일 두 번에 걸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진승현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보도를 통제한 사실은 없고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 사실도 없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 진승현이 상환하지 않은 1,318억원의 행방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진승현 등과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 등 두 건의 수사의뢰사건에 관해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진승현의 정확한 대출사항들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는 이른바 열린금고사건을 비호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 여부와 국정원 간부의 관련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열린금고 부정대출사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세아종금 감사인 신인철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와 관련된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수사결과 일부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속기소를 하고 현재 여죄 등에 대해서 계속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하여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올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원 간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는 신인철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정·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인철의 여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신인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는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였던 설원식, 설 범 부자가 불법대출받은 1,4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였던 설원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를 착수하기 전인 금년 7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조사를 못 했으나 일부 범행이 확인되어서 금년 9월 2일 지명수배조치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설원식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 등 주변인물을 통해서 자수를 권유하고 그외 다각적 방법으로 신병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설 범은 검찰에서 소환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범죄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교육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 위원님께서 BK21사업의 효과에 대해 물으시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등급제로 함에 따라 대학에서 학생선발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착수한 BK21사업은 사업공고 당시의 취지대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분야별로 최고 수준인 2 내지 3개 사업단을 집중지원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이후 대학현장에서는 연구업적을 중시한다든가 또 우수교수를 확보하는 경쟁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등의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을 볼 때도 과학기술분야의 경우에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 즉, SCI 급 논문실적이 3,842편에서 4,545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1인당 논문 수도 2.74편에서 3.24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능성적 9등급제는 수능 총점에 의한 대학의 획일적 서열화 그리고 지나친 학력위주의 학생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98년 10월에 공고하고 2002년에 시행하게 되는 2002년 대입제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히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국·영·수 등의 교과 위주의 지필고사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거의 완전히 자율화하였습니다.

다만 교과 위주의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에 불응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중심 지필고사 채택여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수능영역

별 점수, 학생부 성적, 논술 성적, 면접, 구술고사 성적, 그리고 추천서 등 각종 다양한 전형자료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변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명문고에 대해서 평준화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전형 입학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과열 입시경쟁의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는 1969년부터 서울지역에 처음 실시한 후에 197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고등학교는 1974년도부터 서울·부산지역에 처음 실시한 후에 2000년 현재 17개 시 지역에서 실시 중입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이 평준화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우수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의 해체 또는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의 시·도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관련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제도 등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림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과 鄭哲基 위원님께서 농가부채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뭐냐 그리고 부채경감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였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0일, 10여 일 전에 전국적인 122개 시·군에서 농민들 시위가 있었고 그 와중에서 일부 고속도로가 통행이 제한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농촌에서

제일 현안 중의 현안이 농가부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5차례에 걸쳐서 농가부채대책을 강구해서 약 8조6,000억 정도의 저리자금으로 대하를 해주었고 또 3조3,000억 정도를 농신보로 전환시켜 줌으로 해서 30만명의 농민들이 연대입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의 부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농가부채의 문제점 특히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해서 추진했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돈들이 97년부터 상황이 도래하기 시작하고 농촌 역시 IMF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더욱이 농업재해가 최근년에 들어서 더욱 더 심해지고 또 거기다 농가부채를 98년부터 5차례에 걸쳐서 1년 내지 2년씩 연기하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 집중적으로 농가부채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서 2001년과 2002년에 도래하는 정책자금 2조 5,000억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고 다음에 약 11 내지 12%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영농자금, 농협 상호금융을 쓰고 있는 영농자금을 대해서 이를 거의 반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약 5년 동안 반 수준으로 내리는 조치를 함께 취해 오고 동시에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 계획을 1조8,000억을 했는데 실제 신청이 3조3,0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1조를 더해 2조8,000억 정도를 추가시키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특히 요새 농촌에서 부채문제하고 관련해서 두세 명의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문제되는 것이 옆집에 사는 분들의 보증을 서주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연대입보자한테 채무추심이 들어와서 재산을 차압하는, 가옥이나 토지를 차압하고 또는 경매에 붙이는 문제 때문에 자살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억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연대입보에 관한 것도 동시에 장기저리로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정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지금 여야간에 구체적인 내용과 또 그 형식을 가지고, 형식을 당초에 정부에서는 농가부채특별조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야간에 이것을 특별한 법으로 만들자, 특별히 농민단

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법률 소위를 만들어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게 되고 또 구체적인 경감대책은 그 법 내용에 담게 될 텐데 다만 한 가지 그런 조치를 함으로 해서 제정에 부담되는 재원을 어느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야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야간에 합의가 되면 구체적인 규모 그다음에 그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2001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2001년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원래 5,000억 규모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과 그동안 추진한 부채대책의 소요예산 등을 합해서 2,972억원의 이차보전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생명공학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한국의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농업, 생명공학을 진흥시키는 데서 찾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체세포 복제를 통한 젓소라든가 한우를 생산해서 지금 시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자 개량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대해서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분야에 관한 조직과 인원과 예산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고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도 의논도 드리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容鈞委員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농림부에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압니다마는 지금 제가 묻는 것이 내년도 농림부 예산에 농어촌 부채를 경감해

주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적자금 문제는 지금 새로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거기에 얽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농림부가 그동안에 이 문제에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 문제와 연계되지 않고 농림부가 국가의 농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민의 이 부채경감을 위해서 어떠한 정상적이고 통상적이고 또 국가의 평소 운영에 있어서 성의를 가지고 임해 왔느냐 하는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알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적자금 40조원의 승인을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적자금 40조 안에는 농·수산업 부문이 1조7,0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1조7,000억 가운데 수협중앙회 소관에 1조2,000억이 들어 있고 우리 농협중앙회, 농·축·인삼협이 통합한 통합 농협 쪽에 5,000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부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공적자금을 추가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은 상환을 전제로 해서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자금을 조성해서 제1 내지 제2금융권에 투입하는 그런 자금이고 이것은 나중에 그 금융기관이 정상화된 다음에 다시 상환되는 그런 자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자금은 그런 공적자금하고는 달리 일반재정에서 투입되어야 할 그런 자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이미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농업부문에서의 부채대책과 관련해서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충분히 계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도 예산심의와 함께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노동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德圭 위원님께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

우선 내년 초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특히 민간연구 소라든가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실업숫자가 노동부가 잡고 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연구기관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노동부가 잡고 있는 실업 예상치보다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 저희 정부가 전망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그리고 고용 인프라,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재취업을 시키게 되면 실업이 예상보다는, 일반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과학적인 추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실업증가에 대비해서 정부는 그동안 확충해 놓은 여러 가지의 실업대책을 지금도 계속 보완·정비하고 있고 또 예산도 적정규모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업문제가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든가 노사관계의 협력이 제대로 잘 된다면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된다면 오히려 앞당겨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저희 정부는 철저히 실업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일용직 및 신규졸업자의 실업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절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분야의 일감이 감소하고 또 신춘이면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연히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년에는 약 14만명의 실업자가 그러한 계절적인 요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및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을 특별히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일용

직 직업훈련을 별도로 특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으며 전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취업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제 때에 직접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졸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부지원 인턴제를 확충해서 실시하고 있고 초·중등학교에 전산보조원 제도도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DB 구축 사업을 통해서 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일용직, 신규졸업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안정적인 실업률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실업이 늘면 예산이 적정한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에 편성한 실업예산은 실업률 3.6%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평균실업률은 3.8% 약 8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업예산도 어느 정도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4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동부 소관 542억원은 어제 환노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노동자들이 실직의 고통을 덜 겪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이 고용보험, 취업교육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역점을 둬으로써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178만명의 실업자를 10월 말 현재 76만명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창출이 역시 가장 바람직한 실업대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IT산업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적어도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고용을 통한 실업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 취업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라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직업 적성에 맞는, 신체적인 요인에 맞는 실업대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그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등 취업곤란,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가 여성가장 점포형식자영업 지원이라든가 창업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각 기업에 권고한다든가 해서 이들이 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聖順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聖順 위원님께서는 소득분배 구조개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총괄적인 답변은 재경부장관께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 노동부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기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를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기간을 당초 2000년부터 2002년까지로 확대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취약 근로자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금년 11월24일부터 최저임금제를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도 작년보다 16.6%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급을 시간당 1,865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9,000억원 수준에서 2000년에는 2조7,5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고, 2001년에는 3조원 규모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2억원 규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마련해서 근로자생계비 대부, 장학사업, 의료비, 경조사비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

획입입니다. 2001년 노동부 예산에 반영된 근로자 복지관련 예산은 총 4,431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저소득 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826억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업문제,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聖順委員** 장관님, 임금 근로자 중에서 일용직, 임시직 이런 사람들이 51.7% 가량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상용직화하는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달 계약, 일 년 계약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몇 번 반복하느냐, 얼마 동안 반복할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현실 사정을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聖順委員**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특수활동비가 원래 작년에 보면 4,710억원 예산인데, 이월 전용해 가지고 9,316억원을 썼고, 또 업무추진비도 1조700억원이기 때문에 합하면 한 2조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일반예산 84조원 중에서 2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34%가 될 정도로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총괄심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포기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국회에도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견제나 심의대상에서 거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예산은 정부에서 사실 단 한푼도 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당액이 투명성이 결여된 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어서 만약 이번 국회에서 이번 예산에 요청이 된 특수

활동비 4,990억 원을 만약에 전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산문제는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金元雄委員** 그렇게 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하여 金龍煥 위원님, 金容鈞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등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金龍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에 산청군 생초 IC에서 합천까지를 직결하는 도로 개설 시 필요한 사업비와 국가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전-진주 고속철도 생초 IC와 합천을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지방도의 개선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정부 재정지원 체계상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건설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할 것이며 참고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와 합천 간 거리는 기존 지방도로는 약 35km이고 직결도로를 신설할 경우 약 20km로서 약 15km 정도 거리 단축의 효과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 황매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는 주변 지방도의 교통량이 많지 않으나 장래 교통량 증가 추이에 따라 도로 신설 여부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容鈞委員** 예산이 2,000억이 든다고 계산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도로가 거의 양쪽에 다 나 있습니다. 그것을 관통시키는데 과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건설교통부의 직원이나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다시 검토하십시오. 2,000억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200억도 들까 말까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88고속도로 이야기도 하시고 국도 3호선, 국도 24호선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길이고 88고속도로가 명목상으로 합천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88고속도로는 대

구, 고령, 거창, 함양을 잇는 도로이지 합천은 완전히 변두리를 지나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대진고속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지형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대진고속도로의 개통이라는 경사스러운 국가의 업적이 내년 내로 실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1개 군 전 주민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그런 거대한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형조사를 하시고 도로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예, 도면으로 보면 황매산, 속리산의 터널을 뚫어서 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약 2,000억원이 계산이 됩니다마는 도로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심각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의 근본 틀을 다시 짜볼 용의와 수도권 과밀해소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의 지방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도권 과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재원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서도 예산편성이 도로, 철도, 공항 등 사업별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균형개발 시책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정부부처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추진전략에서 여러 측면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鄭哲基 위원님께서 내년도 SOC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부분 비율을 10% 이상으로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SOC예산 규모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2003년 균형재정달성을 위한 재정규모 억제 등 고육지책의 결과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여건에 상응하는 SOC 투자규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논의해 주신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항만 배분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 중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관해서는 향후 5년간 항만에 대한 투자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교통부분 투자규모 중 1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申鈇泰委員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이 우리 SOC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발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대기업의 턴키 방법으로 일괄발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에서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분리발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서는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이미 저희 부에서는 산하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구매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의 예를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현재는 약 76%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도 중

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도록 제가 다시 한번 중용을 하겠습니다라는 턴키제도에 있어서의 책임소재의 불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정부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申鉉泰委員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직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아건설 부도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연쇄부도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정부에서 업무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 국가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분리발주제도를 산하 각 기관에서 적극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고용도 확대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참고하셔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鄭哲基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 위원님께서서는 항만시설의 부족과 투자부진 상황을 지적하시고 부산신항, 광양항 등을 비롯한 항만건설의 촉진을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을 정부투자로 전환할 의향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에 항만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당시 항만개발계획의 약 절반 정도가 민자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부분의 투자가 부진해서 지금 항만개발이 지체되고 있고 또 정부투자

에 있어서의 항만부분의 비율이 적은 것도 당시의 계획 때문에 SOC 투자비중 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물동량 예측도 많이 바뀌었고 또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새로운 항만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항만시설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꼭 세우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항만건설을 위해서 정부투자 부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울러서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자유치도 활성화하고 또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광양항은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마는 개발속도는 상당히 느려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 66만 평의 항만지원시설용 부지 중에서 착공이 되지 않은 55만 평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법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약부분에 관해서는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鄭哲基委員 그런데 지금 7월의 당정협의회에서 제3섹터 방법으로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즉시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공단이 결국은 기획단 구성 자체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공단이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제3섹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향인 것 같은데 제3섹터에서 비관리청인 컨테이너공단이 주도를 잡게 되면 민간투자로서 어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내부사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정이 협의했던 대로 항만법에 의한 제3섹터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컨테이너공단 이사장에게 지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문제점에 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마는 사업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개발이 더 원활하게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哲基委員 지금 광양항의 경우는 사실상 민자로 하게 되면 투자를 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오히려 제약을 걸고 있다는 것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 점을 장관께서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즉시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龍煥 위원님께서 국무총리께 공개혁을 확실히 해서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질의와 자의적인 추경편성은 제한해야 한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전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전체 예산을 재검토해서 약 20%를 삭감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이를 SOC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총리님께 물으셨습니까. 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경제성장률은 실질성장률 5 내지 6% 수준, 물가상승률 3%대로, 경상성장률이 8 내지 9%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예측기관들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 국채이자 등 필수적인 증액소요가 10조원 이상이나 되었지만 재정규모 증가를 6조원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인 세출소요를 삭감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서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鄭哲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委員 잠시 중단해 주세요.

그 외에 2001년도에도 추경예산을 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사정의 악화, 실업자 대책 혹은 경기부양 등의 이유로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냐 계획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승인 후의 승인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게 되므로 현시점에서 내년도 추경편성 여부를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여야 합의하에 추경편성 요건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鈞委員 한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대단히 실력이 있고 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주 중대하고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 101조에 달하는 예산의 20%를 과감하게 잘라서 일면 근검절약하는 공직풍토 국가경영을 이룩하고, 일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우리 국가가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SOC사업 등 기간산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생각과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뒤에 나오실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부처산하로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 물으셨습니까. 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5개 연구회는 지난 98년 정부와 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서 연구분야는 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기획과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서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기능조정과 정비 그리고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회체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보완할 계획이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43개 연구기관을 과거와 같이 소관부처로 환원시키는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哲基委員 심의관제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심의관은 무엇 때문에 거기다 둥니까? 연구위원회 내에 심의관을 두고 마치 옥상옥처럼 연구소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입니까?

예를 들면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것이 정부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받고, 도대체 이것이 격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각 부처로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옥상옥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詰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해서 각 부처 소속으로 해서 운영한지 한이삼십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연구활동에 대한 어떤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노출이 되었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5개 연구회로 하고 소위 용역활동을 경쟁체제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활동상황을 좀더 지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그때 가서 토의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예산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복지분야예산비중을 15%선까지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지출범위는 각국마다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체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가 곤란합니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97

년 GDP 대비 6.8% 수준이며 이는 GDP 대비 10%를 넘는 선진국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재정규모의 증가율 6.4%보다 훨씬 높은 16.2%의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4%에서 2001년 8.1%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재정여건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교육, 정보화, 금융구조조정 등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의 관련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金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의 2001년 하반기 조기실시에 대한 견해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 상향조정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2001년 하반기 조기실시문제에 관련하여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와 함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동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중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체계구축 공제율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분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2002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수준 상향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자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 의료, 교육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서 9월과, 10월에서 12월 간에 2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은 의료비를 과거방식으로 공제한 데 기인합니다.

2001년부터는 의료비, 교육비의 공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1인당 급여비 지원액이 1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金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분야예산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50억원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예산 1,000억원 증액,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2000년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액 2,604억원 반영, 2교대 근무제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지원에 최소한 440억원 증액 등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부사업의 예산 증액문제는 부별심의와 계수조정과정에서 토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걱정하시면서 내년 예산안중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2003년 재정균형을 위한 특단의 조치나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이 낙관적인데 경제위기가 온다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겠는지 하는 걱정과 함께 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중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우리 경제여건은 여러 가지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라 경기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강화, 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4대부문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경제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투자심리가 되살아나 2001년도 우리 경제는 5내지 6%의 실질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으로 8내지 9%의 경상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것은 민간연구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KDI 등 대부분의 전문연구기관들의 최근 예측도 내년에 팔구%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같은 경제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므로 SOC, 실업 등 부분적인 사업내용의 일부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세입세출규모면에서 특별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공적자금 이자지출 복지 등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하여 재정운영 여건이 다소 어

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4대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마무리하여 경제활력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하고 재정제도 혁신을 통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여건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전문가들이 예산안중 삭감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낸 것이 있습니다.

대개 정상적 경비 또 관행적으로 매년 계상하던 것, 그리고 그간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 세울 때 상당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그런 예산으로서 그때 문제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실효성도 없는 그런 예산이 관행적으로 다시 계상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장관께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과감하게 좀 오히려 삭감을 제안하는 이런 용단을 보여주실 때 정부 각부처에서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또 국민들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말 건전재정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보일 때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과정중에서 이런 점은 과감히 좀 삭감될 부분은 수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金容鈞 위원님께서 총리께 주신 질의내용이나 우리 李在昌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의내용이나 예산삭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주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부별심의에서 토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아침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0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재정의 규모를 대폭 줄여서 짜왔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활동이라든지 또는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배태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재정의 문제를 국회와 상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부별심의회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알겠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李在昌 위원님께서 내년 경제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재정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마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元雄委員 자활보장기금을 내년에 한 푼도 계상을 양으셨는데,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업자 대책도 그렇고 이런 자활대책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만의 책임입니까? 왜 중앙정부에서 다 하려고 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국고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 실업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출발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잘하는 데는 국고보조 같은 것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방 이후 중앙집권적인 그런 하이어나키 시스템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운영해 오다가 사실은 지방자치체로 실시된 지가 역사가 일천한 것은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그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국가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권한이양이 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관행도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金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가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면서 뭔가를 분명히 하는 이런 체제의 발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와 같은 말씀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元雄委員 게으르고 일 안 하는 단체장과 아이디어 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단체장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해도 이미 레이건 때 연방예산 전부 삭감해 가지고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EITC제도를 가지고 한 1,700만 가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미국의 사회복지형태가 자활사업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게을리 해도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잘 알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장관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특수활동비의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국감자료 제출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예산도 그 안에 많이 있고 또 다른 예산과 달라서 현금화가 좀 용이한 예산인데 따라서 사실 더 엄격한 감사나 통제, 견제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검찰과 경찰에 있는 특수예산을 말씀하실 때 수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백보를 양보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밀사업이 아닌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상적인 경비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맞지 않을까요? 또 이미 수사가 끝나고 또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질의하신 특수활동비는 검찰이라든지 경찰, 해경, 국세청 이런 쪽에 다소 상대적으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이쪽에는 여러 가지 범죄수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세원포착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활동은 과거 독재정권이라든지 권위주의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국가나 자유세계에서도 선진국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회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元雄委員 알겠어요. 그 말 제가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부분은. 그런데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

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처럼 기획예산처에서도 총괄예산이라고 안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에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런 나라는 진짜 독재국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밀사업비 아닌 일상적인 경비는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제출되어야 되고 또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가 종료되었다든지 또는 재판이 종료되었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요구하면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또 일부 수사정보비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했더니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그런 유사한 이유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더니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이것 공개해라. 이렇게 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대법원의 확정판결인가요?

○**金元雄委員** 예, 그렇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는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니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법원의 판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金元雄委員** 다시 한번 지금 하신 말씀을 해주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3심제에 의해서 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면 법원의 판례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金元雄委員** 그리고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기밀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한된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로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법무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끝났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공표가 되게 되면 그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인권유린과 관련되어서…….

○**金元雄委員** 아니, 공표된다는 것이 비공개회의를 한다는데 왜 공표가 됩니까?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 전부 다 국별사업에 대해서 비공개회의하는데 대외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각국이 전부 다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 다 밝힙니다. 왜 우리만 낡은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을 강조하십니까? 지금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낡은 관행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특수활동은 자유주의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선진국에도 있다 또 국회 예산심의권도 보장돼야 되고 그와 같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그와 같은 활동도 보호를 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획예산처로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방만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연구를 하시겠다…….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그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회가 만약에 전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우리 국회에서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아울러서 보장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자, 구체적인 토의는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 하시고 앞으로 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와의 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에서 일단 정회하고 여덟 시에 다시 속개해서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회)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통일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통일부차관입니다. 통일부차관께서는 이 시간에 이산가족방문단 만찬을 주재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님과 李在昌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金容甲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고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의연한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남북협상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 통일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같은 인식의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입산료 대가의 재조정 협상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으로 금강산 관광협력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리고 張忠植 적십자총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잖아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일단 이것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지난 50년간 냉전의 대결사를 종식을 시키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정책 노력과 북한의 대응 전략 등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관한 발전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는 가운데 역지사지의 사고와 승승전략, 이른바 윈윈게임으로 불리워지는 승승전략의 입장에서 성실성과 의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진체제가 엄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또 북한이 까다로운 대화협상자임을 인식하는 바탕에서 남북합의하에 관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볼 때에 인내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칠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일회일비하기 보다는 일관성을 견지해서 신중하고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당하게 임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 정부는…….

○**金容甲委員** 차관, 내가 질의한 요지는 50년 만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남북회담이 재개되어서 펍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회담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든 회담을 북한이 한 번도 약속된 날짜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제때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또 날짜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또 장소 이쪽에 하라면 이쪽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張忠植 적십자사총재의 이런 사건까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는 환영을 했지만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고 정말 흥분하지 않는 분개하지 않는 국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통일부에 있는 거예요. 통일부가 협상자세에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측이 호흡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측이 회담을 연기할 때는 사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도 북한 측이 호응하지 못하면 회담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담은 연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측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또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6·15공동선언 이후에 5개월 만의 이 기간만을 놓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측도 이 한반도 냉전종식의 흐름을 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도 변화야

산다 하는 그런 생존전략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인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 주도하에 남북한 관계개선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과다한 대북지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신축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능력 또 남북한 관계개선의 진척도 또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 문제, 국민의 여론 등을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또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 사후에 특히 대북지원 관계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차관, 왜 국민들이 퍼준다는 소리를 하게 되었는지 차관은 그 뜻을 알겠어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金容甲委員** 홍보 부족이 아니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구분해 주셨습니까마는 현정부가 대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퍼준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容甲委員** 왜 사실 퍼준 것이 없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민간지원, 금강산관광 입산료 그다음에 정부지원 다 합쳐서 약 1조원을 그동안에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바로 퍼준다는 인식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 그것도 줄속으로 빨리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그래서 퍼준다는 소리가 국민들 가운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감정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지원 문제는 충분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해주시 바랍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입산료의 재협상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현대 측이 주관해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 염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최선의 협상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에서도 현재 북측과 입산료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문제는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로서는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張忠植…….

차관, 우선 張忠植 적십자사총재가 인터뷰한 월간조선 10월호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金容甲委員** 그 대목 중에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됩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마는 북한체제를 남북한 비교차원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발전이 없다는 그러한 논조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한이 남북기본서 합의할 때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합의를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金容甲委員** 차관, 북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이 내정간섭이요? 사실 그대로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북한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내정간섭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보는 관점은 개인에 따라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 할 때는 말은 신중히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이 張忠植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북한을 상당히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말꼬투리를 잡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정간섭이라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그래 그쪽에서 내정간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張忠植 대한적십자사총재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후반부에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항 중심으로 해서 북한 측에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저희들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金容甲委員** 통일부에서는 신문지상 보고 압니

까? 남북회담이 정치회담의 가장 대표회담인데 대표회담을 하고 있는 통일부장관, 차관이 신문지상을 보고 알 정도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물론 적십자사에서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초안을 작성을 했고 저희 통일부의 담당 주무국장인 인도지원국장이 거기에 조언을 해 가지고 작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張 총재께서 결심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인도지원국장이 그 내용을 알았으면 차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어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온 그 정도 수준밖에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金容甲委員** 이것이 벌써 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으로부터 사과서신을 주고 거기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그 발표가 지금 적십자회담이 이루어지는 하루 전날 신문을 통해서 앞줄에는 앉지 말고 뒷줄에 앉아라, 그리고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 이런 수습책을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는 ‘초청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데 이 일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金容淳 비서가 왔을 때 그 金容淳 비서가 우리 TV를 보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우리 땅, 강성대국으로 통일하자’ 그것 국민들이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張忠植 적십자총재가 인터뷰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의한 적 있습니까? 항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金容淳 비서가 특사로서의 자격으로 왔는데 그 당시의 발언은 제주도 땅이 북한의 영토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우리는 상당히 아량이 있어 가지고 북한이 아무리 귀에 거슬린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데 북한은 이 인터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트집 잡아 가지고 만일에 북한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완전히 재갈을 물리고 바로 이런 비참한 꼴을 보이겠다 하는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현재 말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사퇴설이 어디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쪽에 잘못하면 통일부장관도 북한 金正日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꾸고 유임시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이번에 앞으로 어떤 회담의 계속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당당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차관이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당당함은 저희들이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대등한 입장에 있는 북한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종합역량으로 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長兄의 입장에서 신축성과 포용성은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委員** 하여튼 신축성 포용성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쪽의 국민의 정서와 감정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겠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회담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이 앞으로 장래가 밝은 것입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지금 초기에는 국민의 지지가 있다가 지금은 상당히 열이 식어지고 도리어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珍富委員**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아까 金容甲 위원께서 발언하신 북한 분들이 와서 ‘제주도, 우리 땅이다’고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실히 해주시고,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원래朴 모 부총재가 ‘왜 이북사람들은 저렇게 제주도를 좋아하냐’ 하니까 金杞培 사무총장이 ‘제주도는 반란의 땅’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金容甲 위원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정확한 어휘, 문장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金容甲委員**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확한 위당은 잘 모르겠지만 그 뜻이 ‘제주도도 우리 땅, 강성대국으로 통일하자’ 이 비슷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혹시 누가 아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잘못되어서 속기록 삭제해요? 뭐 걸핏하면 속기록 삭제해요?

○高珍富委員 그것은 신문에도 났던 사실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사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고 하셔야지……. ‘왜 이북사람들은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하나’ 朴燾太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金杞培 사무총장이 ‘제주도는 반란의 땅이라서 그런다’ 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사과성명도 다 해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金容甲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高珍富委員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統一部次官 梁榮植 ‘제주도가 반란의 땅’이라고 한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3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일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金容甲委員 가만있어요. 차관, 분명히 ‘우리 땅’과 비슷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것은…….

○金容甲委員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직접 나왔다니깐요. 직접 나도 들었는데…….

○統一部次官 梁榮植 자세한 것을 봐야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容甲委員 우리가 느끼기에는 제주도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이상하다 하고 느꼈는데 앞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강성대국으로 통일하자’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안 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겠습니다.

○高珍富委員 다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도 내일부터 문제를 삼겠습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이 공식 입장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金容甲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委員長 張在植 나중에 합시다. 서로 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에서 그치시지요.

○權琪述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물어보세요.

○權琪述委員 솔직히 몰라서 묻습니다. 진솔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항간에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너무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항간에는 ‘1조원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차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정부에서 준 게, 이북으로 간 게 99년도에 얼마, 2000년도, 금년도에 얼마 또 내년도에는 얼마나 줄 계획을 하고 있는가,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가, 총액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북에 지원된 것이, 무상으로 지원된 것이 얼마이고 차관으로 지원된 것이 얼마인가 또 내년도는 얼마나 지원이 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統一部次官 梁榮植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불확정성, 불가예측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이 대북지원문제는 인도적인 차원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기업 간의 경제협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95년6월 이후에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총 4억7,000여만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 차원이 약 3억8,000만불, 민간 차원이 8,900만불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 지원규모 16억3,000만불의 28%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정부 출범 이후에 32개월 동안 1억 8,600만불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대북식량지원을 할 때는 차관 형식의 공여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측의 상환능력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는 북한도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 또 미국으로부터의 경제봉쇄 해제 등을 우리가 감안해 놓고 보면 앞으로 해가 갈수록 북한도 대외관계에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서에는 현물제공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금으로 상환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현물로써 받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조건없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權琪述委員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95년 이후에 전부 토탈 4억7,000만불밖에 안 됩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습니다.

○**權琪述委員** 4억7,000만불이라고 그러면 약 6,000억 미만인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차관은 전부 얼마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차관관계는 저희 부 소관사항은…….

○**權琪述委員** 그래도 통일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안 하고 계십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다른 분야에서의 차관은…….

○**權琪述委員** 통일부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統一部次官 梁榮植**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지금 사실 하도 항간에 말이 많아서 이런 문제를 제가 그냥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관 간 것이라든지 전부 다 지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지원과 협력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바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5,00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1,500억원을 삭감해서 여야 공히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사후에도 집행내역을 소상히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결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우리의 능력 범위 또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權琪述委員** 국민의 여론 감안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고 있습니다.

○**權琪述委員** 그 서민들의 아픔도 참고하셔서 무리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복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조절을 해주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좋은 충고의 말씀 깊이 새겨들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만요. 곧 한나라당의 의

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책질의가 내일, 월요일 계속될 테니까 웬만하면 보충질의 이 정도로 마치고 차관, 답변 마치시지요? 차관, 답변 다 안 끝난 것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李在昌 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李在昌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북식량지원,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8조5호에는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에 따라서 남북회담을 통해서 합의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SOC사업이라든지 또 경의선철도라든지 도로연결사업 등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이 너무 추상적…….

○**李在昌委員** 그것이 몇 조에 있어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8조5항이 되겠습니다.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거기에 그렇게 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할 테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래서 그동안에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발전시켜서 확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력문제는 협상이 개재되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예산에 확정을 해서 내놓으면 대북협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가 비정상적인 정전체제에서부터 앞으로 평화정착이 되고 정상적인 남북평화체제로 나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반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그 상황하에서는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在昌委員**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차관 답변은 남북협력기금법 8조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하는데 남북협력기금법의 모범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협력기금법은 여타 기금법 처럼…….

○**李在昌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기금법이 운용되는 것 아니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이것에 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그것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협력사업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 16조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주체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7조에는 사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량을 사서 보낸다, 경의선철도라든지 도로 이런 것이 남북협력사업으로 개념이 인정되어야만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李在昌委員** 그런데 이 협력사업을 하려면 우선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경의선철도하고 도로 시공하는 것을 누구한테 사업을 승인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협의회가 아니라 누구한테 했느냐 말이에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대한민국 정부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하는, 소위 정부가 하는 것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남북협력사업을 할 때를 전제로 해서 만든 법이에요.

차관, 안 그래요? 내용을 보세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흐름은 민간인이나 또는 단체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일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그러면 어떤 협력사업을 하느냐,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통일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남북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기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나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 협력사업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협력기금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정부가 하려면 협력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써야 돼요.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에요.

둘째, 앞으로 철도·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위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봅니까, 국내 SOC사업으로 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DMZ 인근지역을…….

○**李在昌委員** DMZ 말고 남방한계선…….

○**統一部次官 梁榮植**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특성이고 뭐고 그것보다도 개념을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방한계선 이남에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북한에 가서 어떤 지원을 하는 협력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위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사업이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우리 쪽에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철도청의 예산으로 상당부분 보수공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SOC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협력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든, 정 안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소위 예산의 집행에 의해야지 어쨌든 이것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마구잡이로 막 써요? 그것이 옳다고 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현재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사업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아니, 그것은 자꾸 남북협력사업이라고 개념을 정해서 그렇지 거리로 보나 사업물량으로 보나 휴전선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12km 중에 4km밖에 안 됩니다. 8km는 전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주권이 미치고 또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대교 이북의 도로도 예산을 가지고 확장을 이미 했었고 또 철도에 대해서도 예산에 의해서 설계도하고 용지매수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9월18일 기공식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1,200억 이상을 투입해서 협력기금을 쓰고 그래서 온전하게 소위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인이 정말 남북 협력을 할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할 수 없고 이렇게 마구 쓰고 나서 금년도에 5,000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좌우간 진솔하게 답변해 보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남북 경협사업의…….

○**李在昌委員** 어째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법률에 맞지 않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협력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을 함으로써 마치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집행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이봐요, 차관! 남북협력사업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서울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남북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협력기금 가지고 할 것이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것은 케이스별로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在昌委員** 분명하게 기준이 있는데 무슨 케이스예요? 그 지형 잘 알지요? 문산에서 임진강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협력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평상시의 철도와 도로사업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앞으로 모든 SOC시설 남북 하고 연결되는 것이면 협력기금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임진강의 수방사업 같은 것도 협력기금 가지고 다 할 것이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임진강 수방사업도 남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현재 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李在昌委員** 아니, 협의했다고 해서 모두 협력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협상을 하는 것도 우리 영토가 아니고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우리

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북협력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제정했고 또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관 논리에 의하면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법에 의해서 기금을 동의받았으니까 합법적이라고 요전에 통일부장관 답변을 하던데 그 논리 가지고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자꾸 여기서 궤변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리고 이번 협력기금 5,000억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법에 맞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 수정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협력사업을 할 것에 대한 지원은 기금으로 넣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남북 하고 하는 사업은 전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해서 5,000억 요구한 것, 수정을 할 용의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정리를 하세요. 부별심의할 때 다시 또 물을 테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알겠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리고 며칠 전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포로나 또 남북어부를 이산가족 수준에서 남북상봉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런데 그런 기준이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번 국군포로가족 한 명하고 남북어부가족 한 명이 이번에 북한에서 온 방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국군포로와 남북어부문제는…….

○**李在昌委員** 아니,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사항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統一部次官 梁榮植** 현재로서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군포로나 또 납북어부를 소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산가족으로 계속 취급을 할 겁니까? 이번에 처음 이런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간에 주장했던 것은,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는 이산가족과 다른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어긋나는 것을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이산가족의 개념은 지금 말씀대로 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하고 또 국군포로문제도 협의의 개념으로는 휴전 이후에 법적으로는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 내부에는 지금 국군포로지원법도 있습니다마는 남북협상에 관한 한은 이산가족의 광의의 개념 속에 포함을 시켜서 조용하게 협상하는 것을 정부가 지침으로, 지금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앞으로도 이것은 북한 측의 반응과 또 협상의 그러한 호응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광의의 이산가족개념에 포함시켜서 조용하게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국군포로나 또 납북어부를 별도의 지위에서 우리가 송환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아예 포기하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산가족방문단에 포함시켜서 오는 그 길을 택하겠다, 협상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상봉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더 지혜가 모아진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니까 정부에서 분명하게 방침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는 지위가 이산가족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포기하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쪽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은 상봉이 아니고……. 뭐 이런 개념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우

리가 계속 밀고 나간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저 그때그때 쉽게 북한과 협상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만 봐 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의 가족들은 영영 기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군포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李在昌委員** 그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이 설령 당장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이분들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현실상황이 어렵다는 점도…….

○**李在昌委員** 그렇게 해야지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그저 협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통일부에서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이산가족 재결합의 목표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합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최선의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또 하나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 또 그것이 양 남북한 측의 장관급 회담에서도 논의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 초에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할 때 우리로서 어떻게 金正日 위원장을 맞이할 것인가, 예를 들면 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을 때와 같이 많은 인파에 의한 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정말 인공기가 서울에 휘날릴 경우를 가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국민들 간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내년 초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관계는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적절한 빠른 시기에 오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감안해서 일정계획을 작성해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시킬 계

확입니다.

○李在昌委員 대체로 언제쯤이면 국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아무래도 북측으로부터 확실한 일정이 통보된 이후에, 또 이것은 공개할 사항도 있고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보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容甲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張忠植 적십자총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金容淳 비서가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도 ‘우리 땅’, 내 위당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9월15일자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우리 땅이고 인민이 통일된 강성대국에서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주도 자연사 박물관을 참관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로 남한에까지 와 가지고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 高珍富 위원께서 잘 못 듣고 이것을 속기록 삭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차관, 이해하시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金容淳 특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남북공동선언합의서에 보면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된 우리 민족통일국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를 마치 북한이 주도적으로 통일해서 북한 땅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위당 자체는 이것이 정확합니다.

○高珍富委員 저도 백두산 가도 ‘우리 땅’ 합니다. 평양 가도 ‘우리 땅’ 합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와서 金容淳 그 양반이 서울도 ‘우리 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3의 아픔도 아물지 않았는데 왜 그 당시에 꼭 제주도가 나와야 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다른 분도 아닌 金容甲 위원한테서 나온 그 말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도 백두산 가서 ‘우리 땅’ 할 수 있고 평양 가서 ‘우리 땅’ 할 수 있어요. 또 金容淳 그 분이 와서 서울도 ‘우리 땅’ 할 수 있어

요. 왜 지금 4.3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왜 그때 제주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분도 아닌 金容甲 위원께서, 그래서 그에 대한 이의를 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가도 다 우리 땅이라고 저도 합니다.

○金容甲委員 우리 高珍富 위원께서 상당히 민감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제주도도 우리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인민이 통일된 강성대국’ 이것이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때문에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金容淳 비서가 한 뜻은 우리 차관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를 해서이지 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와서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대국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 정서상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주도든 서울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차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에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가지고 간 것을 상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로 들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일로 향한 민족의 의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차관, 아까 金容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아까 답변하셨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다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容甲 위원님, 지금 의총이 조금 바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차관, 이만 답변을 마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측 답변이 진행 중이고 아직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한나라당의 의총이 끝나면 속개를 해서 두 개 부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무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

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관계관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가하셔도 좋겠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총이 끝나시고 나면 다시 예결위장에 오셔서 답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총하고 본회의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 무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부처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산회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丁世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행정자치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容鈞 위원님께서 복잡한 도로명 부여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체계적인 도로명 부여방안에 대한 대책과 연구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로이름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비록 일부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지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에 방향성과 순차적인 번호를 표시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委員** 강남에서 제일 큰 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테헤란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容鈞委員** 강북에서는 어디가 제일 큼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종로, 을지로…….

○**金容鈞委員** 예, 종로가 보면 종로 1가·2가·3가·4가·5가·6가로 쭉 나가지요. 거기에 평행선으로 청계로가 있고 을지로가 있고 퇴계로가 있는데 이것이 1·2·3·4가로 나가기 때문에 강북에 가면 몇가 그러면 금방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로 이것은 제일 근대화된 이후에 지은 이 문화민족이 만든 도로인데 1·2가가 없어요. 없고 저런 식으로 팽개쳐 놓았기 때문에 무슨

역에 가서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옛날에 내무부 때 도로명을 매겨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을 미국에 출장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온 것 같아요. 제1블럭, 제몇 호 이런 엉뚱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 안 붙인 것보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1·2·3·4로 나가고 가·나·다·라로 나가면 간단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블럭 썩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해 놓고 또 반포의 한신아파트 가 보세요. 한신 32차, 21차하고 21차는 저기 있고 10차는 여기 있고 42차가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전혀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도로에 번호를 매겨서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정비가 안 되었더라도 현재 있는 땅에 숫자를 매겨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면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마침 우리 국토개발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容鈞委員** 건국한 지가 52년이 되는데 50년간 연구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전문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委員** 도대체 도로 숫자도 하나 못 매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금 진주-대전 간의 고속도로를 내년에 개통하게 되는데 이것이 서부 경남과 대전을 잇는 민족의 대동맥이 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합천군입니다.

그래서 산청군을 통해서 진입도로 인터체인지 하나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리저리 떠넘기고 있어요. 행정자치부로 떠넘겼다가 또 도청으로 떠넘겼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이야기가 옳다면 행자부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 최단도로 개설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지금 말씀하신 도로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容鈞委員** 이것을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하고 경남지사하고 세 사람이 모이든지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대·진고속도로

이것이 민족의 한 동맥이 되는 도로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따로 소외된 군이 있어 가지고 그 도로의 혜택을 못보고 빙 돌아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는 고속도로 본래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내용이 파악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委員** 알겠습니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다음 鄭哲基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聖順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예산액 대폭축소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주로 저학력 고령자 등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내년도의 실업률이 금년도 수준인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방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동향과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실업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어 걱정하시는 신규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업종합대책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종합대책안이 마련이 되면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학력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발시 30세부터 55세 연령층, 여성세대주, 장애인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 가지고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실업자, 실질적 가구책임자로서 재취업이 어려운 사오십대 연령층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폭넓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트타임제를 보다 활성화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聖順委員** 지금 공공근로 나이제한이 60세까지지요?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예, 60세까지인데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55세까지는 가산점을 주고 60세 쪽은 주지 않아서 참여가 어려운 편입니다.

○**金聖順委員** 그런데 아직 어려운 분들, 정말 비

참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장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65세, 70세까지 하든지 제 생각 같아서는 60세에서 70세까지는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맞는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자재비, 사업설계비, 이것이 즉 사업운영비 항목 아닙니까? 사업운영비 항목이 12.3%인데 그래도 생산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일거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이 사업운영비 항목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지금도 저희들이 사업운영비 항목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聖順委員** 그러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만요, 金聖順 위원님!

본회의가 곧 있을지 몰라가지고 의사국에서 예결위를 좀 신속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聖順委員**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요. 저는 기업경쟁 모양으로 좀 경쟁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 경우도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심사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렇게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알겠습니다.

○**申鉉泰委員**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申 위원님, 의사국에서…….

○**申鉉泰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동사무소 분동관계 있지 않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예.

○**申鉉泰委員** 인구 기준이 몇 명입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저희들이 과대 동의 경우에는 보통 인구를 3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申鉉泰委員** 저희 지역구의 인구가 지금 6만 6,000명인데요. 인감증명 하나 떼러가고 주민등록 하나 떼러가고 이러려면 택시값이 동사무소까지 가는데 4,000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6만 6,000명인데…….

그런 것은 분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인구로는 6만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申鉉泰委員**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그런 동이 몇 군데나 있는지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鉉泰委員** 예.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張錫準** 보건복지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민의료비 추가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며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金容鈞委員**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保健福祉部次官 張錫準** 예,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金聖順 위원님께서서 민간용자 보육시설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현 이자율을 6%에서 3%로 하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MF 이후 경제여건이 악화되었고 보육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그러므로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현원을 및 보육료 징수율 등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용자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의 연장, 법인전환의 유도, 보육 도우미 배치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말씀하신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 확보 및 타용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또 법인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유휴공간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면서 연체금리 인하문제 등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聖順 위원님께서서는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聖順委員** 잠깐만요.

그것은 그냥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또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으니까, 사실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건강증진기금, 아까 제가 물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폐지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張錫準** 예.

○**金聖順委員** 건강증진기금 폐지, 이것이 151억인데 폐지하는 이유가 97년에 시행되어가지고 기금이 151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폐지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담배 한 갑에 2원씩 부담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다 부담금 5%하고…….

이것을 없애게 되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든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99년6월25일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원을 부담하던 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8원으로 낮추면서 시행시기를 2000년 1월1일부터 하자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배사업자 측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기금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담배세에서 8 내지 10%를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배세 전액은 전부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정책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보험재정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악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대신 의료보험 진료비 중에서 폐암진료비로 나가는 것이 5,000억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하게 폐암 걸리고 있는데 담배 소비량도 줄이고 또 기금을 늘리고 해서 예방사업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50억의 기금 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획예산처장관이 계시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한 발 나가서 담배뿐 아니고 주류에도 건강증진세나 보건세를 붙이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張錫準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건강증진기금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위원장, 신상발언 일이 분만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예, 말씀하세요.

○金容甲委員 여기 우리 張在植 위원장님이 계셔야 할텐데 안 계셔서 좀 유감입니다마는 나중에 전달되어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나가는 조선일보 기사 중에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金容甲이 박살내라, 金景梓 위원에게 메모’ 張在植 위원장께서 그런 메모를 박사awl, 다시 말해서 金景梓 위원에게 전달한 메모입니다.

그 메모내용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오늘 金容甲이 어떤 미친 발언을 할지 모르는데 전날에는 우리가 얼떨결에 넘겼지만 오늘은 그 발언내용을”, 괄호하고, “오늘도 발언 도중에 그런 말이 나오면 즉시 강력히 항변하고 박살내 주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중단되더라도. 위원장.” 이런 메모를 金景梓 위원에게 위원장이 보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시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사 위원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때로는 강한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수습하고 회의를 잘 운영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이런 메모를 보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위원장도 안 계시고 또 金景梓 위원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고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은 위원장은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 앞에 사죄를 하고 위원장을 그만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일 다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丁世均 위원장대리께서는 위원장에게 저의 신상발언을 꼭 전달해 주시고 사과와 위원장 사퇴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기를 바

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위원장! 張在植 위원장 어디 갔어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당에서 협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가신 것 같습니다.

정부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산회)

○出席委員(44人)

- | | | | |
|-------|-------|-------|-------|
| 高 珍 富 | 權 琪 述 | 權 五 乙 | 金 景 梓 |
| 金 德 圭 | 金 文 洙 | 金 聖 順 | 金 榮 煥 |
| 金 容 甲 | 金 容 鈞 | 金 龍 學 | 金 龍 煥 |
| 金 元 雄 | 金 一 潤 | 金 貞 淑 | 金 學 元 |
| 金 洪 信 | 羅 午 淵 | 閔 鳳 基 | 柳 三 男 |
| 柳 在 珪 | 朴 世 煥 | 裴 基 善 | 孫 泰 仁 |
| 宋 錫 贊 | 宋 永 吉 | 宋 榮 珍 | 辛 基 南 |
| 申 榮 國 | 申 鉉 泰 | 尹 榮 卓 | 李 康 斗 |
| 李 根 鎭 | 李 良 熙 | 李 在 昌 | 李 漢 久 |
| 李 浩 雄 | 張 在 植 | 丁 世 均 | 鄭 宇 澤 |
| 鄭 哲 基 | 鄭 亨 根 | 咸 承 熙 | 黃 祐 呂 |

○請暇委員(2人)

- | | |
|-------|-------|
| 沈 揆 喆 | 李 源 性 |
|-------|-------|

○委員아닌出席議員(5人)

- | | | | |
|-------|-------|-------|-------|
| 金 明 燮 | 金 浩 一 | 都 鍾 伊 | 陸 堯 相 |
| 安 商 守 | | | |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金 光 琳 |
| 진 문 위 원 | 張 基 泰 |
| 입 법 심 의 관 | 李 鍾 澤 |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 | | |
|---------------|-------|
| 국 무 총 리 | 李 漢 東 |
|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陳 稔 稔 |
| 통 일 부 장 관 | 朴 在 圭 |
| 법 무 부 장 관 | 金 正 吉 |
| 국 방 부 장 관 | 趙 成 台 |
| 교 육 부 장 관 | 李 敦 熙 |

과 학 기 술 부 장 관	徐 廷 旭	중 소 기 업 청		
농 립 부 장 관	韓 甲 洙	청 장	韓 竣 皓	東 午
산 업 자 원 부 장 관	辛 國 煥	차 장	辛 東 午	
정 보 통 신 부 장 관	安 炳 燁	특 허 청 장		
보 건 복 지 부 장 관	崔 善 政	차 장	林 來 圭	劉 永 詳
환 경 부 장 관	金 明 子	차 장	劉 永 詳	
노 동 부 장 관	金 浩 鎭	철 도 청 장		
건 설 교 통 부 장 관	金 允 起	청 장	鄭 鍾 煥	崔 吉 大
해 양 수 산 부 장 관	盧 武 鉉	차 장	崔 吉 大	
기 획 예 산 처 장 관	田 允 喆	해 양 경 찰 청 장		
○ 出席政府委員		청 차 장	金 宗 佑	李 昶 祐
통 일 부 차 관	梁 榮 植	관 세 청 차 장	李 昶 祐	李 大 正
외 교 통 상 부 차 관	潘 基 文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	李 朴 正 求	
법 무 부 차 관	金 慶 漢	○ 法院行政處參席者		
국 방 부 차 관	文 一 燮	처 장	邊 在 承	
행 정 자 치 부 차 관	金 在 相	○ 監査院參席者		
교 육 부 차 관	金 相 權	원 장	李 種 南	李 秀 一
과 학 기 술 부 차 관	韓 錠 圭	사 무 총 장	李 秀 一	
문 화 관 광 부 차 관	金 順 珪	○ 金融監督委員會參席者		
산 업 자 원 부 차 관	吳 盈 敎	위 원 장	李 瑾 榮	
정 보 통 신 부 차 관	金 東 善	○ 憲法裁判所參席者		
보 건 복 지 부 차 관	張 錫 準	차 장	徐 相 弘	
환 경 부 차 관	鄭 東 洙	○ 中央選舉管理委員會參席者		
건 설 교 통 부 차 관	姜 吉 夫	사 무 차 장	任 左 淳	
해 양 수 산 부 차 관	洪 承 湧	○ 中央人事委員會參席者		
법 제 처 장	朴 珠 煥	위 원 장	金 光 雄	
국 정 홍보 처 장	吳 弘 根	사 무 처 장	崔 錫 忠	
국 가 보 훈 처 장		○ 女性特別委員會參席者		
청 장	金 有 培	위 원 장	白 京 男	
차 장	金 鍾 成	○ 公正去來委員會參席者		
국 세 청 장	安 正 男	위 원 장	李 南 基	
조 달 청 장		부 위 원 장	金 南 炳	
청 장	金 成 鎬	【報告事項】		
통 계 청 장	尹 政 英	○ 議案回附		
병 무 청 장	吳 鎬 祿	2001년도예산안		
경 찰 청 장	李 茂 永	(10월2일 정부제출)		
기 상 청 장	文 勝 義	11월30일자 회부됨		
문 화 재 청 장	徐 廷 培			
농 촌 진 흥 청 장				
청 장	李 銀 鍾			
차 장	朴 昌 正			
산 립 청 장				
청 장	申 洵 雨			
차 장	金 容 漢			